

##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은 ...

### 1. 각계각층 기독교대중의 연합조직이다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은 목회자,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민중교회연합, 신학생 등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포괄하고 있는 모든 계급·계층의 애국적이고 양심적인 기독교대중의 연합조직이며, 각지역에서 전개되어온 기독교운동역량을 하나로 묶어 세운 연합조직이다.

### 2. 한국사회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하는 조직이다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은 기독교대중의 힘을 결집하여 오랜 분단과 독재가 부식시켜온 우리 사회의 모든 반민중적·반통일적 기치와 질서를 타파하고 자주·민주·통일의 성취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을 이땅에 실현하고자 힘차게 실천해나가는 조직이다.

### 3. 한국교회의 민족민주적 변혁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은 한국사회의 변혁과 동시에 한국기독교의 민족민주적 변혁을 추진한다.

- 교회의 제반 구조를 민족민주적으로 변혁
- 한국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민중운동의 전통에 입각하여 민족민주적으로 변혁
- 복음의 해방전통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일치운동(에큐메니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교회문화를 민중의 삶에 기초한 민족문화로 개혁

### 회 원 단 체

|                 |              |                |             |
|-----------------|--------------|----------------|-------------|
| 서울기독교사회운동연합     | 02-763-9563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02-763-4480 |
| 인천기독교사회운동연합     | 032-763-7559 |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 02-742-3746 |
| 전북기독교사회운동연합     | 0652-82-9887 | 한국기독교노동자총연맹    | 02-744-2035 |
| 광주전남기독교사회운동연합   | 062-54-7373  | 한국기독교농민회       | 02-762-7893 |
| 대전·충남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 042-626-7872 |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 02-763-8776 |
| 대구경북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 053-425-3528 | 한국민중교회운동연합     | 02-864-4649 |
| 부산기독교사회운동연합     | 051-464-8020 |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 02-744-2748 |

## 평화군축운동으로 통일된 겨레를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미가 4:3)—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



차 례

- I. 성서의 평화와 기독교인의 사명
  - 1. 평화의 주 고백과 통일의 사명(이삼열) ..... 3
  - 2. 성서의 평화(볼프강 후버) ..... 12
  - 3. 평화의 성서적 근거(한국 기독교장로회 총회) ..... 14
  
- II. 평화군축운동의 의의와 90년도 실천방안
  - 1. 한반도에 있어서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성격과 내용(장유식) ..... 16
  - 2.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군축의 방향(이삼열) ..... 20
  - 3. 주한미군 감축전망과 한미안보관계의 재편(한계레사회연구소 국제팀)..... 28
  - 4. 남한의 군축안과 문제점(김창수) ..... 32
  - 5. 최근 북한의 평화보장대책에 대하여(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사  
설회의, 정무원연합회의) ..... 37
  - 6. '90년 평화군축운동의 의의와 기독교운동의 실천방안(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  
합) ..... 45
  
- III.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의 제과제
  - 1. 주한미군과 자주국방(정시진) ..... 50
  - 2. 휴전협정과 평화협정(김세진, 이재호 추모사업회) ..... 72
  - 3. 핵전쟁의 위협과 비핵지대화 운동의 방향(김세진, 이재호 추모사업회) ..... 81
  - 4. 팀스피리트와 태평양 연습(PACEX) (전원하) ..... 91
  - 5. 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이영희) ..... 96
  - 6. 한반도 군축을 둘러싼 주변국의 전략과 입장(전원하) ..... 112



## 평화군축운동 자료집을 내며

올해 1월 체니 미국방장관이 '주한미군단계적 감축'을 미의회에 보고하고 한반도의 미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신문을 몇 번이나 다시 보았다. 이제는 정말 우리 민족이 그토록 염원했던 평화·통일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인가.

그러나 계속되는 방위비 분담 증가, 팀스피리트 훈련 강행, 환태평양 훈련(RIMPAC)에 한국군 참가 등 오히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동맹과 군사훈련은 단계적 주한 미군철수에 대한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다. 게다가 이번 주미철 조치가 실질적으로 별 변화가 없는 전략변화에 따른 군살빼기라는 군사전문가들의 연구결과는 배신감마저 느끼게 한다.

한반도는 전세계적 평화 군축의 무드에 비례해 얼어가고 있다.

핵무기의 공포로 증강하는 군사비·군사력·무기, 그로써 더욱 두터워만 가는 분단 장벽으로 이제는 더이상 주님께서 주신 평화와 화해의 사명을 지배 논리에 결박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 감고 있는 민족증오의 결박, 가공할 살상무기에 대한 우상숭배, 분단의 죄사슬을 끊어내고 이제 힘찬 평화·군축 십자가 행진의 진군을 시작할 때이다.

이 자료집은 90. 4. 23. 기사련평화군축정책협의회의 발제물들과 최근 논의되는 평화군축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였다. 기사련 회원들의 보다 높은 요구를 만드는 글을 자료집 팀이 직접 제작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이 자료집을 발판으로 같이 고민하고 실천하며 내용을 풍부히 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90. 5

민족의 비극 6.25발발 40주년을 평화군축의 원년으로.

## I. 성서의 평화와 기독교인의 사명

### 1. 평화의 주 고백과 통일의 사명

이 삼 열(송실대 교수·철학)  
(기독교사상 1989. 6)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라고 고백했다. 베드로가 고백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속에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여러 가지 속성이 함축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든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하는 자'와 같은 내용이었을 것이다.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누구로서 고백하느냐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윤리적 실천을 사명으로 삼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으로 등장하게 되자,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로 고백하며, 평화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심각히 논의하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며, 평화를 만드는 자입니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마 5:9)고 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평화를 만드는 자'(peace maker)로 대체될 수 있다.

사실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선언"은 그리스도를 평화의 주로 고백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분단과 갈등과 억압의 역사 속에서 평화와 화해와 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한겨레가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을 극복하여 통일과 평화를 이루는 일이 한국 교회에 내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임을 믿는다.

한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특별히 1980년대에 와서야 통일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과 역사적 경험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1979년에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던 박 대통령과 유신독재 체제가 무너졌으나 기대했던 민주주의는 실현되지 못하고, 새로운 군사독재 체제가 5공화국으로 수립되었을 때,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민주주의는 영원히 짓밟혀버린 것같이 되었을 때, 왜 한반도에서는 독재체제만 반복되며 민주주의의 실현이 불가능한가에 대한 반성이 심각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 구조가 국가 안보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고, 국가안보는 남북한의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분단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안보를 구실로 한 군사 쿠데타의 반복은 결국 한반도의 분단 체제와 그 정치 구조에 원인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체험 속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분단 체제라는 것이, 반민주 독재와 인권 탄압, 경제적 착취와 예속과 같은 모순과 비리를 낳는 근본 악임을 감지하게 되었으며, 이 원죄와 같은 분단이라는 구조적 악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민주화도, 인권도, 사회정의도 바르게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었다. 아마도 1945년 분단 이후에, 통일이 민주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이때만큼 심각하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민들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미국의 주권심사는 한국의 민주화나 인권 문제보다는 분단된 체제의 유지와, 정권의 안정을 기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부정적 역할은 한반도의 분단이 그대로 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과 전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

물론 '80년대에 와서 열화같이 일어난 유럽의 평화운동이나, 세계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으킨 평화선교에 대한 새로운 각성이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데 많은 자극과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 □

평화의 주를 고백한다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사명과 윤리적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사명을 다한다고 할 때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와 사회현실 속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평화의 의미가 무엇이며,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성서적 조명이 필요하게 된다. 즉 평화의 윤리적 실천을 위해서 평화의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었으며, 평화가 가장 중요한 윤리적 명령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예수가 탄생했을 때 이미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눅 2:14)라고 예수나심의 의미를 평화로서 부각했고, 예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고별하면서 남긴 말씀도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너희들의 평화와는 다르니라"(요 14:27)며 자신의 선교를 평화로써 요약했다.

그러나 평화의 복음과 교훈은 서구 기독교에서나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상 많이 곡해되어 있으며, 때로는 평화에 모순되는 행위나 태도를 평화의 수단으로서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범해 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전통 속에 잠재한 타계주의와 심령주의가 평화의 개념과 내용을 현실적이며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하게 했으며 평화를 주로 마음의 평화나 영혼의 평화로, 혹은 저 세상에서나 누리게 되는 유토피아적인 평화로 제한해서 받아들이는 데 원인이 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며, 기도나 할 뿐이라는 개념,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생각이, 기독교의 평화 사상을 오랫동안 지배하여 왔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나타난 평화의 개념은 훨씬 더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것이었고, 주관적 마음의 상태뿐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동적인 과정으로서의 평화였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평화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 부재의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에베소서 2:14-18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엡 2:14-18),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된 관계를 폐하고, 적대관계의 둘을 하나로 새롭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함축하고 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대립을 만들고, 불을 지르러 왔다"(눅 12:49-53)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께서 평화의 개념을 아이러니칼하게 설명하시면서, 평화를 정의의 개념과 연결시키고 사회구조적인 변화나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의 반평화적인 발언으로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도피적인 내세의 평화나, 마음의 평화에 안주했던 역사적 기독교는 세상 속에 있는 반평화적이며 파괴적인 일과 행위들이 있는 데도, 이를 비판하거나 제거하는 실천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해내지 못했다. 즉 전쟁이라든가, 파괴, 살상, 폭력들에 대하여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많은 교회들은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을 의로운 전쟁(just war)이라는 명분으로 옹호했으며, 적대국을 마귀의 세력으로 규탄함으로써, 국가안보에 필요한 원수상(enemy image)을 심어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했다. 이것은 서양의 기독교가 4세기 이후에 국가교회(state church)가 되면서, 자기네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은 무조건 성전(Sacred war)이라고 정당화하던 그릇된 전통에서 온 것이었다. 특히 한국의 기독교는 국가권력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던 유교나, 호국불교의 영향 아래서 자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독재와 탄압과 폭력, 전쟁으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취하지 못하고, 이를 무조건 지지 옹호하는 오류와 과오를 범해 왔다. 평화의 복음과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이로 인해 충실히 실행될 수가 없었으며, 평화의 사명은 매우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처방에만 머물러 있게 되었다.

오늘의 기독교가 평화에 관한 윤리적 책임과 선교적 사명을 현세적인 삶과, 사회구조 속에서 감당해 가려고 한다면 '평화를 만드는 일'인 평화선교(peace-making mission)를 오늘의 평화연구나 평화교육, 평화운동과의 관련 속에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대의 평화연구나 평화운동은 평화에 관한 추상적이며 형이상학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관념들을 비판하고 극복하였으며, 보다 실천적이며 기능적이고,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 개념과 정의들을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평화연구들에 주목하면서, 기독교의 평화선교를 구체화하고, 전략화하는 일은 매우 중대하며 시급한 일로 생각된다.

원래 평화란 말은 성서 속의 shalom에서도 그렇지만, 건강이라든가 안전, 복지, 질서 온전함, 구원, 정의, 조화 등과 같은 다양하며 포괄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것은 희랍의 Eirene, 로마의 Pax, 중국의 화(和)의 개념에서도, 다른 문화나 언어 전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평화는 흔히 인삿말로 쓰여졌다. 한국의 인삿말인 안녕(安寧)이라는 말도 shalom과 유사한 뜻을 가지며 건강이라든가 안전복지, 잘 있음(well-being)을 의미하고 있다. 어쨌든 평화라는 말은 항상 인간의 삶이 충분하게 보장되고 유지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 질서, 의식주의 해결 등과 같은 필수 조건들이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이 복잡해지고 확대되면 그만큼 평화의 개념과 차원은 더 포괄적이 되고 다양해져 갔던 것이다.



평화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겠지만, 공기나 물과 같이 인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화연구자인 바이제키는 평화를 "과학기술 시대에 있어서 인간의 삶의 조건"이라고 규정했던 것이다. 아시아교회협의회가 주관한 '아시아 평화회의'(1985, 오끼나와)에서는, "아시아와 같은 나라들에서의 평화는 우선 민중의 삶(Life for people)이라고 이해된다"고 선언했다. 평화운동은 따라서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죽음의 세력들에 대한 투쟁"(Struggle against the forces of death)이라고 규정되었다.

오늘날 Johan Galtung이나 Dieter Sengaas 같은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이 주장하는 평화의 개념들을 토대로 하여 생각해 볼 때, 평화를 만드는 일인 평화운동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전쟁과 폭력에 대한 반대운동이며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고 삶의 조건들을 확충해 가는 운동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일단 평화의 반대개념을 전쟁과 폭력이라고 놓고 볼 때, 필자는 평화운동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모두 폭력의 차원과 종류에 관계되어 있다.

첫째로, 평화운동은 우선 현존하는 전쟁과 폭력을 반대하며 제거하는 운동이다. 전쟁을 '반대할 뿐 아니라 전쟁준비를 반대하는 운동이기도 한데, 그것은 모든 전쟁이 준비되어서 일어나며, 전쟁은 준비 단계에서 막아야지 터진 다음에는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군비 경쟁이나 대량 살상의 핵무기를 반대하며, 모든 종류의 물리적 폭력과 파괴에 대항하며 인간의 생명을 지키려는 운동이 평화운동이다.

둘째로, 평화운동은 현존하는 폭력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폭력을 제거하는 운동이라 하겠다. 폭력과 전쟁의 원인이 되는 갈등 관계나 적대 관계, 공격성 등은 곧 폭력을 유발시키는 잠재적 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제거하는 노력과 운동은 평화를 만드는 일이 된다. 흔히 종족간에, 종교간에, 계급간에, 지역간에 존재하는 편견이나 원수 감정, 갈등들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갈등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류 운동이나 대화, 원수 감정이나 공격성을 줄이기 위한 평화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평화운동은 물리적인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보호할 뿐 아니라 사회나 국가 안에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으로부터도 인간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인간의 생명과 삶은 전쟁이나 살상 같은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빈곤이나 차별, 억압, 소외, 저개발 등과 같은 잘못된 사회구조에 의해서 더 많이 희생되며 죽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비판적인 평화연구자들은 평화의 적극적 개념을 구조적 폭력의 제거에서 찾아야 하며, 그래야 평화가 단순히 전쟁의 반대만이 아닌 정의로운 사회 건설과 연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농촌의 총각이 장가를 못 가고 빛만 늘어나서 자살을 하는 경우는 결국 구조적 폭력에 의해서 희생이 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농민들을 소외, 차별, 억압하는 사회구조를 고치지 않고서는 이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기 어렵다. 이 단계에서의 평화운동은 곧 인권운동이나, 사회정의운동, 민주화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같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폭력을 제거하는 운동들을 통틀어서 포괄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는 윤리적 의무를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면, 평화의 문제와 과제를 위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하여, 평화운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평화의 주 고백은 평화를 만드는 구체적이며 사회구조적인 평화운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평화운동을 실천한다는 것은 반드시 통일의 과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하고 일어나기 쉬운 전쟁이 남북한간의 전쟁이며, 가장 극단적인 적대 관계와 증오심이 남북한 동포 사이에 있고, 빈곤과 억압과 독재와 같은 구조적 폭력과 모순들이 분단 체제라는 반평화적인 구조 속에서 배태되었기 때문이다. 평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제가 남북의 적대적이며 반평화적인 분단을 극복하지 않고서 성취될 수 없는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분단을 그대로 두고서도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왜 한반도에서는 꼭 통일을 해야만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의 불가분리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평화의 사명은 자명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꼭 이것이 그 복잡하고 어려운 통일과업과 연결되어야 하느냐는 데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통일이 없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겠지만 필자는 특히 여기에 신학적이며 기독교 윤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의 평화와 통일운동은 신학적 반성과 윤리적 각성 위에서만 든든하게 전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평화운동의 세 가지 차원과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

첫째로, 평화는 온전한 삶을 의미하며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며 온전한 삶을 가져와야 하는데 이것은 남북의 분단 상태가 지금처럼 지속되고 영구화하는 한 기대해 볼 수 없다. 기독교가 민족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민족주의나 민족의 우월감이 아니라, '민족의 삶'에 대한 긍정과 관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 통일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모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은 "내 백성이 고역을 견디다 못하여 신음하며 아우성을 치고 있구나.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터이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전져 내어라"(출 3:9-10)는 것이었다.

기독교가 특히 남북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데 선교적 사명감으로 나서야겠다는 이유는 무엇보다 이 '민족의 삶'에 대한 관심과 책임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다. 일제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것도 고통과 신음 속에 시달리는 민족의 삶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완전한 민족의 해방이 아니었으며 완전한 자주독립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민족의 의사와는 반대로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38선으로 나누어 점령했으며, 각기 친미적인, 친소적인 단독 정부를 남북한에 세워 두 개의 불완전하며 불안정한 국가와 체제로 분단시키고 말았다. 이 분단은 정치적으로도 우리 민족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고,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부자연스런 것이었다. 1945년 일제에서의 해방을 전후해서 민족 내부에는 사상과 이념의 차이로 분열과 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것은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있는 것이며, 이것이 나라를 가를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2차 대전 이후에 갈라지지 않을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외세에 의한 분단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적대적이며 항구적인 민족분단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타율적으로 부자연스럽게 분단된 남북한에서 민족의 삶은 지난 40여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럽고 억눌리며 마비된 삶이었다. 이 분단은 국토와 민족을 반으로 갈랐을 뿐 아니라 사상과 이념도 반쪽으로 나누었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도 모두 좌우로 나누어, 남북한은 각기 반대되는 한 쪽만을 택하게 함으로써 양자를 극단적인 대립과 적대관계 속에 놓이게 하였다. 뜻도 내용도 알지 못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민족의 삶을 반으로 갈라 지배하면서 양쪽에 모두 반편의 마비된 분단체제와 사회를 만들어 놓게 된 것이다.

이 분단은 처음부터 긴장과 갈등과 대결과 전쟁을 낳을 수밖에 없는 반평화적인 분단이었다. 상대방의 존재가 곧 나의 적이 되며 나의 안보의 위협이 되는 분단이기 때문에 서로가 무력을 강화하고 상대방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기의 안보가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분단이다.

이러한 분단 체제 속에서 민족의 삶은 자유를 잃고, 주어진 체제와 정치구조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되어 왔으며, 체제의 비판자나 이탈자들은 무자비하게 탄압되고 희생되었다. 남쪽에선 공산주의자들을 숙청한다고 4·3사태 때 제주도에서 5만여 명의 양민을 학살했고, 여수, 순천, 거창에서 수천 명씩을 죽이고, 6·25 직전에는 보도연맹 사건으로 6만여 명을 재판도 없이 죽였다. 조금만 사상이 이상하다고 하면, 무조건 끌어다 골짜기로 데려가서 죽여 없앴다. "골로 간다"는 말이 유행했는데 이전 죽으러 간다는 말이었다. 북한에서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반동분자로, 제국주의 앞잡이로, 기독교인으로 몰려 희생을 당했으며, 수많은 우리 동포가 동포의 손에 의해 죽어야만 했다. 다시금 1950년 6·25전쟁 때는 수백만의 동포가 총칼로, 폭탄으로 서로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 뒤로 계속된 수많은 숙청사건, 간첩사건으로 희생된 동포들은 부지기수이며, 1980년에 일어난 천여 명의 광주시민들의 학살도 분단으로 인한 체제의 반대자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감행되었던 것이다.

단절과 대결의 상태에서 가장 미워하고 공격적인 관계에 빠져버린 남북한은 이 세상에서 가장 먼 나라가 되었으며, 서신왕래도, 방문도 두절된 남북한에 흩어진 이산가족들은 40여년 동안 만나거나 소식을 듣지 못하며 부모와 형제와 부부가 갈라져서 가정이 불구가 되는 비극과 실움을 안고 살게 되었다. 1985년에 남북적십자회의의 주선으로 몇몇 이산가족들이 잠시 만나고 헤어졌을 때, 북의 아들과 남의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떨어질 줄 모르던 장면은 우리 민족 전체의 가슴을 울리게 했다. 다시 만나거나 목소리를 듣거나 편지를 쓸 수도 없는 어머니와 아들은 이제 다시 못 보더라도 매월 음력 보름날 밤에 보름달을 보면서 서로 얼굴 본 듯이 생각하자며 헤어졌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부부가 함께 살며 고향을 방문할 권리는 인간의 자연법적인 권리인데, 이 권리를 빼앗기고 사는 1천만의 이산가족들은 마치 서로 다른 별에 사는 견우 직녀처럼 보름달이나 보면서 그리움을 달래야 하는 고통과 한을 견디며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삶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는 분단과 대결의 상태를 이대로 두고서는 언젠가 남북한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남북한에서 150만의 정규군과, 1,500여 대의 전투기, 그리고 핵무기와 미사일, 핵지뢰와 화학무기들이 쓰여지는 한반도의 전쟁은 7천만 우리 민족의 삶을 강그리 파괴시키고 말 것이며, 삼천리 금수강산은 초토화되고 말 것이다. 동물도, 식물도, 강물도 다 파괴되고 오염된 다음에 무슨 민족의 삶이 있을 수 있겠는가?

기독교는 바로 이 '민족의 삶'에 대한 책임과 관심 때문에 맹목적인 군비증강과 경쟁, 핵무기의 배치 등을 묵인할 수 없으며, 남북한의 관계를

하루 빨리 불가침조약이나 평화협정을 맺어서 평화적 관계로 만들어야 하며, 무기와 장비와 군대 수자를 상호 감축함으로써 전쟁연습과 도발을 하지 않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책임감에서 한국 교회의 통일선언은 통일의 5대 원칙 가운데 민족의 삶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자는 '민족 우선의 원칙'과 분단 체제의 안보나 무력 대결보다 긴장 완화와 평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평화우선의 원칙'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분단이 가진 반평화적이고 반생명적인 구조를 똑바로 들여다보고, 민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정직하게 듣는다면, 이 분단의 극복을 위해 통일운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처럼 양의 생명을 지키고, 그 삶을 풍부케 하기 위해서 왔다"(요 10:10)고 하시며 자기 민족의 삶에 관심을 보이셨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눅 19:44) 자기 민족의 생존과 평화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평화란 갈등 관계와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며 신뢰를 회복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기 때문에,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한이 화해를 이루고, 어떤 형태든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않으면 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기독교가 특별히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운동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화해를 강조하며 적대관계나 증오심을 해소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복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남북한의 분단과 대립은 무엇보다 이념적 갈등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 이데올로기의 갈등에 직접 간접으로 연루되어 있고, 또 여기에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 기독교였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서구 세계에서 시민계층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연합했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유난히 심각한 대결과 방해의 관계 속에 빠졌던 것이 사실이다. 남한의 기독교는 분단시대 40여년 동안 반공 이데올로기의 온상이 되어 왔고, 반공 체제를 옹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기독교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탄압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피해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반공의식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남북한이 대화를 하고 화해와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화와 화해가 필요한 만큼,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대화와 화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아마도 오늘날의 남북한의 세력 분포를 볼 때, 근본적으로 기독교와 공산주의, 기독교사상과 맑시즘의 적대 관계와 갈등 관계를 풀어내는 것만큼 통일을 위해 중요한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오늘날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하고 있으며, 19세기 식의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관계는 여러 나라에서 극복되고 있는데, 한반도에 있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수많은 오해와 편견과 증오심에 휩싸여 서로 극단적인 원수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한 채 있다.

여기에는 물론 기독교를 반민중적이고 반민중적이라고 생각해서 박해한 공산주의에도 책임이 있지만 공산주의를 악마적인 집단으로 증오하고 저주해 온 기독교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기독교인들은 분단 40여년 동안 늘 통일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그것은 북한에서 김일성 집단과 공산주의자들이 없어지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막연하게 생각해 왔다. 그들과 공존하면서, 화해하면서 만들어내는 통일은 별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남북한 정부가 7·4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민족대단결이란 원칙을 의심스럽게 보았고, 행여 반공정책이 약화될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으며, 이것은 오늘에



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러한 기독교의 반공적 태도는 지난 40여년간 분단을 고착시키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며, 따라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오히려 반대하며 방해하는 역할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제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그 선교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NCC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족 분단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분단의 정당화와 심화에 기여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화해의 기본원리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며 반성하는 데 있다. 앞으로 북한 사람들은 그들대로 분단과 대결과 전쟁에 대한 자기 비판과 반성을 해야겠지만, 남한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과, 과장되고 극해된 원수상과 동족상잔의 과오를 우리 쪽에서 먼저 반성하며 비판하는 일이 없이 진정한 화해와 통일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잘못된 원수상을 시정하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과 공격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며, 이것은 서로 만나서 대화하며 교류하는 과정이 없이 생길 수 없다. 서로 다르고 미워했다라도,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고 있더라도,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풀어나가고, 서로 뗄 수 없는 한 민족공동체임을 거듭거듭 확인해 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이념과 체제와 가치관의 이질성보다는 민족의 동질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선언이 주장하는 신뢰와 교류 우선의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방송도 들을 수 있으며, 신문도 서적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수 있어야 가능하며, 북한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화해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버린 분단 체제와 분단 의식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며, 때로는 자신의 뼈를 깎는 아픔을 견디면서 독선적이고 반편이 된 우리 사회와 자신의 의식을 변혁시켜야 하는 힘든 작업이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막힌 담을 헐고 원수인 관계를 폐하며 돌이 나가 되는(엡 2:14) 화해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과 신앙의 토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남북한의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이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세계로, 참된 평화는 인간을 억압하며 구속하는 모든 종류의 구조적 폭력들로부터 해방될 때에 이루어지는데, 오늘의 분단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한이 이 구조적 모순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참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 이 분단 체제는 민중의 억압과 수탈, 인권의 유린과 박탈, 비민주적 독재와 외세의 종속을 가져온 근본 원인이었던 것이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바로 분단이 가져온 구조적 모순들과 폭력들을 제거하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정의로운 평화를 가져오는 해방적인 통일(libertating Unification)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가 없는 평화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판처럼, '거짓 평화'요, '위장된 평화'일 뿐인 것이다. 한반도에서 1953년 휴전협정이 조인된 이래 지난 36년 동안, 어떤 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평화시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미·소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핵무기와 미사일에 의해서, 겨우 돌발사태가 억제되고 있는 불안한 평화요 위장된 평화이기 때문이다. 정의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가 아니라, 군사력과 무기를 강화함으로써 억지로 유지되는 평화는 Pax Romana와 같은 거짓 평

화일 뿐이다. 더구나 이 힘이 인간의 자유와 사회정의의 짓밟고, 민족의 자립과 발전을 저해하며 억압하는 것일 때 이런 평화는 지배세력의 안보에만 관심을 가진 위장 평화일 뿐이다.

이러한 평화는 선지자들과 예수님 자신에 의해 여지없이 비판되고 폭로되곤 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일생 평화를 만들기 위해 평화적으로 일하신 분이지만 로마 법정은 그를 "평화를 교란하는 자"(눅 23:14)라는 죄목을 씌워 십자가에 처형하는 형벌을 받게 했다. 가난하고 억눌린 민중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며, 정의를 실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운동, Pax Christi는 로마 법정의 무력으로 약자를 억누르며, 짓밟음으로써 유지되었던 로마의 평화 Pax Romana에 의해서는 평화를 교란하는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늘 남북한의 분단 체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누리지 못하고, 미·소 강대국의 분할된 안보 체제에 편입되고 예속된 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한은 미국의 방위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고, 핵우산과 태평양 전략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북한이 얼마나 주체적인지 알 수 없으나 소련과 중국의 군사력과 무기체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남북한은 미·소 강대국들이 무슨 핵무기를 가져다 놓건, 무슨 핵전쟁을 한반도를 위해서 감행하든 막을 힘이 없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은 아직 남한에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 권리도 없고, 국회의 동의도 없이 미국은 마음대로 핵무기를 가져다 놓고, 늘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운동은 아마도 이러한 Pax Americana와 Pax Sovietica 식의 위장 평화에 대한 도전이 되며, 우리 민족이 보다 더 주체성과 자주성을 요구하며 획득하는 해방적인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은 또한 대내적으로도 독재의 억압과 횡포를 물리치고, 억눌리고 소외되었던 다수의 민중들에게 자유와 평등과 희망을 주는 그런 통일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민중들이 그렇게 통일을 바라는 것은 분단 체제와 구조 속에서 민중의 삶과 복지가 해결되지 못하고, 강대국의 지배와 신식민지적 구조 속에서 우리의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은 소외된 민중들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논의에서부터 모든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소외되기 쉬운 민중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통일선언(NCC)이 주장하는 민주적 참여와 '민중 우선의 원칙'인 것이다.

민중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통일논의나 민중들의 삶과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려는 통일의 방향은 정의로운 평화를 실현하는 길이 되겠지만, 아마도 이러한 운동은 오늘의 민중소외적인 정치 체제나 독재적인 지배 계층에 대해서는 도전과 항거가 될 것이며, 평화와 안전을 교란하는 행위로 보이게 될지 모른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까지 독재정부와 집권층은 통일논의의 자유나 통일운동을 전적으로 억압해 왔던 것 같다.

기독교가 지향하는 통일은 참된 평화가 실현되는 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와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는 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평화를 교란하는 자로 몰려서 십자가를 지거나 수난을 당할 수도 있음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십자가를 지면서도 평화를 만드는 자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마 5:9) 하셨기 때문이다.



## 2. 성서의 평화—살롬

### 볼프강 후버

(독일 하이델베르크 평화연구소장)

(교회와 세계, 1988. 9. 신뢰구축을 위한 동서간의 대화中)

유다-그리스도교의 전통에는 평화와 정의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의 회복이 갖는 총체성을 나타내는 낱말이 있다. 살롬(Shalom)이 그것이다. 이 낱말은 큰 일에서든 작은 일에서든, 하느님과 우리의 만남에서든, 이웃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든 바람직한 관계의 총체성을 나타낸다. 평화의 개념들을 논할 때, 살롬 전송에 의해 유도되는 그리스도인의 사고는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평화이해에 관한 이와같은 논의를 유럽의 전통에 입각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유럽의 사상에는 상호대립적인 두 가지 평화개념이 흐르고 있다. 하나는 파스 로마나(pax Romana)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성서의 살롬 전통이다. 지배 질서로서의 파스 로마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살롬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이처럼 서로 상반된 평화이해가 한국의 문화적, 종교적 전통에서도 나타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인은 양자의 상이성을 유럽사를 관통하고 있는 동시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제국주의 때문에 세계적인 규모로 확대된 갈등에 입각하여 기술해 보려고 한다.

파스 로마나는 황제들이 통치하던 로마제국, 곧 그리스도교 초기에 그 골격이 완성되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광대한 지역을 지배하는 국가로서 헤게모니를 관철시키고 있었다. 이 제국의 중앙권력을 장악한 최고권자는 주로 두 가지 수단을 이용하여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였다. 관료제도와 군대가 그것이다. 지방장관들은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위임받고 있었다. 이와같은 지방장관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일 것이다. 그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로마제국의 일반적인 통치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원칙은 "평화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피정복자들을 살려주되 반역자를 멸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평화를 헤게모니로서 파악하는 사고에는 세 가지 기본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평화에 대한 질서의 우위, 피정복민들 사이에 다수의 동화민(同化民)들을 만들려는 관심, 그리고 필요하다면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용기있게 저항하는 소수를 분쇄하겠다는 결의가 그것이다. 로마제국에서 실시된 십자가형 밑바닥에는 헤게모니(즉 지배)에 의한 평화라는 개념이 깔려 있다. 십자가 처형을 공개적으로 실시한 것은 온갖 형태의 저항과 반란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평화관은 평화가 정복지의 전선에서 끝장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만인들은 평화의 저편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 그 평화관의 지도적 원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한 평화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개념 형태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첫째는 국가 안보 개념이다. 이 개념은 공공연하게 군사력에 의한 억압을 통해 민중의 자결권과 민중의 충분한 국정 참여를 저지한다. 둘째는 전쟁억제 개념이다. 이것은 전쟁을 준비함으로써 전쟁을 막으려 하며, 세계를 영향력과 지배권에 따라 몇개 영역으로 분할시킨다. 두 개념은 본질상 모두 파스 로마나의 지도적 원리를 계승하고 있다. 다만 현재에는 대량살상의 수단이 그 개념에 장착되어 있음이 다른 점이다.

성서의 평화 개념인 살롬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민중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온갖 형태의 공동체를 포괄하는 문명의 창출을 의미한다. 히브리 성서의 살롬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평화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룩된 공동체의 온전함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 이외의 자연계에 대한 태도와 정치 질서에도 적용된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구원성들은 서로 평화의 인사를 주고 받는다.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 '살롬'이 그것이다.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사람들은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평화를 서로에게 나누어준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닌, 하느님에게서 온 평화는 인간적인 공동체의 기본적인 표지이다.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위협받거나 파괴되면 단순히 지상의 평화만이 위태로워지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선물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다.

파스 로마나 개념에는 배제의 논리가 깔려 있다. 파스 로마나는 나에게서는 평화가 있고 상대에게는 평화가 없으며, 나에게서는 자유가 있고, 상대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는 차별 위에 이룩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파스는 지배에 기초한 평화이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무력은 이러한 평화를 보장해주는 여러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살롬에는 포용의 논리가 전제되어 있다. 나의 평화는 상대의 평화에 따라 좌우된다. 안전은 나 자신과 상대의 공동 안전이어야 한다. 자유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자유이다. 이 평화의 기본 원칙은 지배가 아니라 더불어 사

는 효과적이고 총족된 삶이다. 무력은 이러한 평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살롬의 목표는 무력을 극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무력을 호전적으로 사용하는 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성서적 신앙사의 가장 감동적인 특징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에서는 하느님이 역사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한 방법으로 전쟁을 이용하리라는 관념이 아직도 지배적이었다.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방어한 것에는 하느님이 그 백성을 편드는 전쟁과 갈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쇠살을 만드는 시대에 도달하리라는 환상을 보여준다(이사야 2, 4. 미가 4, 3).

신약성서는 이 환상을 받아들여 평화를 화해의 은총, 곧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은사로 이해한다. 평화의 의미는 예수가 십자가위에서 죽음으로써 이룩된 화해의 현실에서 밝혀진다. 이때문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과제는 "화해의 사역"으로 규정된다(고후 5, 17 이하). 평화의 길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드러난다(마태 5, 43-48). 이 실천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대립과 반목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항상 따라다니는 일종의 상수(常數)임을 깨달아야 한다. 적대감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적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첫번째 단계이다. 그것은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종교 생활에도 엄존하는 현실이다. 적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사사로운 도덕적 영역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적을 사랑하라는 것은 인식을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 적대감을 품고 그것을 발산시킬만한 온갖 이유를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서 찾아 내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적대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보는 심성을 갖고 있다. 그러한 심성을 가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공격적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방어적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적을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을 오로지 적대감의 원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동에 위협적인 것이 있어서 우리 자신이 적으로 간주되지 않는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갈등을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현실주의의 특수한 형태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정치 윤리에 기여한 중요한 점이다.

끝으로, 적에 대한 사랑은 사랑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계심을 풀게 하고 적대적인 폭력을 중지시키는 창조적인 사회적 사유를 촉진시킨다.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이 창조적인 사회적 사유에 대해 삶의 세 측면에서 진술한 바 있다. 개인적인 분쟁과 법적 투쟁과 외세에 의한 정치적 지배가 그것이다(마태 5, 38-42). 그가 이렇게 한 까닭은 적을 사랑함으로써 생겨난 창조적인 사회적 사유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유는 결코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될 수 없다. 거기에는 정치적 차원도 당연히 포함된다. 정치적 행위의 기본 테마는 적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에 대한 사랑을 함양시키려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어설픈 구상이 아니다. 그것은 적대적 구조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통찰을 담고 있고 무기생산기술의 현발 전 단계를 감안할 때 적대감이 만의 하나라도 실제로 표출되면 결과는 자멸의 것이라는 인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따라서 적대감은 통제되어야 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을 알고서 사랑하는 것'(intelligent Love for enemies; C.F.V. Weizsäcker)은 이와 같은 목적에 기여할 것이다.

두개의 상반된 평화 개념들이 충돌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을 지킬 수가 없다. 그들은 파스 로마나가 아니라 살롬을 선택해야 한다. 지배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공동체에 입각한 평화를 지지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서의 살롬관이 현재의 세계 상황에 꼭맞아 떨어진다. 이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성서가 말하는 살롬의 범위는: 평화를 해치는 현재의 위협의 규모와 그 긴박성에 부합된다. 하느님의 평화 약속은 평화를 인류가 따라야 할 삶의 방도로 보게 하는 지평을 열어준다. 그 약속에는 힘에 대한 통제와 정의의 증진 및 자연과의 화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의 메시지는 화해의 약속이 그 모체이다. 그 메시지는 적에 대한 사랑에 근간하여 행동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현재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평화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무기에 의해 유지되는 현재의 평화와 결코 타협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 무력에 의존하는, 곧 지배에 의한 평화는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총족된 삶을 실현시키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의 노력은 살롬을, 무기체계의 극복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우리는 그것이 길고 긴 장정임을 알고 있다. 무기가 판치는 세계에서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이 장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무기를 침묵케 하고, 인민은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다.'



### 3. 평화의 성서적 근거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민족통일과 평화를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의 선교과제, 1988)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 곧 "shalom" (Shalom)이다. 하나님의 평화는 현상 유지를 말하지 않는다. 회담어의 평화인 "에이레네"(eirene)는 일차적인 총체성이나 일치기 아니라 현상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이권다툼 사이에서 끊임 없이 투쟁하는 가운데 체결된 깨어지기 쉬운 협정 같은 것이다. 로마의 평화인 "파스"(Pax)는 정복을 통한 평화를 말한다. 이것은 정복과 억압으로 침묵하게 하고나서 그것을 평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합의 평화" 나 "로마의 평화"에 비해 "하나님의 평화"는 일차적이고 총체적이며 완전한 평화이다. 협정이나 정복 또는 억압으로 현상을 유지하며 그 상태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는 원인을 제거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평화는 곧 하나님의 정의이며 사랑이다

예언자들은 왕들 편에서 현상유지와 정복을 평화라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을 비판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평화를 선포하였다. 미가는 거짓 예언자들을 이렇게 비판한다. "예언자라는 것을 입에 먹을 것만 물려 주면 만사 잘 되어 간다고 떠들다가도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는구나!" (미가 3: 5).

또한 거짓평화의 현실을 이렇게 폭로한다.

"아름 가문의 어른들이라는 것들이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들이 정의를 역기위하고 끝은 것을 구부러 뜨리는 것들이야.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의 피를 빨아 시온을 세웠고, 백성의 진액을 짜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예루살렘의 어른이라는 것들은 돈에 팔려 재판을 하고 사제라는 것들은 돈을 보고야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야훼께 의지하여,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허황한 환상이나 보고 속임수로 점이나 치면서 야훼의 말을 사칭하는 것들이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지껄이고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들이다. 너희가 허황한 환상을 보고 속임수로 점을 치면서 야훼의 말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주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터무니 없는 환상을 보고 허무맹랑한 말을 하였다. 내가 기필코 너희를 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허황한 환상이나 보고 속임수로 점이나 치는 예언자라는 것들을 이 손으로 치리라. 내 백성의 모임에 들이지도 않고 이스라엘 추속의 명단에서도 빼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 가지도 못하게 하리라.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야훼임을 알리라. 그 예언자라는 것들은 무엇하나 잘되는 것이 없는 데도 잘만 되어 간다고 하며 나의 백성을 비둘게 이끌었다. 그래서 백성이 담을 쌓으면 그 위에 회나 바르는 것들이다(겔 13: 1-10). 죄없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왜 괴롭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터무니 없는 소리로 그 마음을 꺾어 주었다. 그런가 하면, 죄없는 자는 나쁜 길을 버리고 살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옆에서 부채질을 하였다. 내가 이제 너희로 하여금 다시는 허황한 환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속임수로 점을 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 백성을 너희의 손에서 구해 내리라.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리라"(겔 13: 22-23).

이사야는 궁극적으로 평화의 메시야와, 평화의 새 나라를 이렇게 선포한다.

"마구 짓발던 군화, 피투성이 된 군복은 불에 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시는 아드님, 그 어깨에는 주권이 매어지겠고 그 이름은 탁월한 경복가, 용사이신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입니다"(사 9: 4-6). "이세의 그루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돌아 난다. 야훼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문과 용기를 주는 영, 야훼를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그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 질만 보고

재앙은 무슨 재앙이나?' 하는구나! 시온이 갈아 엮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돌부더기가 되며,

성전 언덕이 잠초로 뒤덮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너희 탓인줄 알아라." (미가 3: 9-12).

또한 예레미야는 평강이 전혀 없는데도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였던 거짓 예언자와 정면 대결하여 도리어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다.

"위아래 할것 없이 모두 남을 뜯어 먹는 놈들, 예언자 사제 할것 없이 모두 사기나 치는 것들, 이 백성의 상체를 건성으로 치료해 주면서 '괜찮다', '괜찮다' 하는구나

사실은 괜찮은 것이 아닌데

그렇듯이 역겨운 짓을 하면서 부끄러운 줄이나 알더냐?

부끄러워 했으면 괜찮고 창피한 줄이나 알았다면 괜찮다.

그런것들이라, 모두 무더기로 쓰러져 죽으리라.

내가 혼내 주러 오는 날 모두 비틀거리다가 쓰러지리라.

이는 내 말이다. 어감이 없다(렘 6: 13-15).

결국 거짓 예언자 하나니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았다(렘 28장).

에스겔도 역시 이와 같은 투쟁을 하였다.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 사람이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자처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저주받아라. 너희 발현을 보지도 않은 채 멋모르고 제 생각에 끌려 다니는 미련한 예언자들아. 이스라엘이 너희의 예언자들은 허물어진 옛 성터나 돌아다니는 여우 같은 것들이다. 이스라엘 추속을 지키는 성이 무너졌는데도 올라 가서 다시 성을 쌓아 야훼의 거듭 날 전쟁에 대비하기는 커녕

재판하지 아니하고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 주고요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 주리라. 그의 말은 몽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부드러운 자를 죽이리라.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리라. 누대가 새끼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염소와 함께 덩굴며 새끼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붙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덩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짐뱃이가 살모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짐뱃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걸음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야훼를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사 11: 1-9).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불의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거나 정복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평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평화가 현상유지적이거나 정복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역사상 많은 전쟁이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의로운 전쟁으로 정당화되었고, 심지어 식민지 정복 전쟁도 하나님의 평화인것 처럼 속임수로 정당화되었다. 또한 온갖 독재의 탄압이 국가 안보와 평화유지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일하려면 성서의 예언자들을 처럼 먼저 거짓 평화를 폭로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서적 근거에 비추어 볼때 세계의 평화는 제국주의가 극복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될 때, 곧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주와 자립에 의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민족공동체의 평화는 우리 사회에 정의가 이루어질 때, 곧 민족의 자주와 자립이 이루어지고 평등과 자유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분단이 극복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성서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곧 민족의 자주와 자립을 위해 일하는 것이며, 평등과 자유의 민주주의를 위해 일하는 것이고, 분단 극복과 통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 1. 한반도에 있어서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성격과 내용

장 유 식

(현 정세와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두리신서)

앞에서 우리는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현재 우리의 평화운동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정확히 인식해내고자 함이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한반도 평화운동의 성격과 내용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한 필요는 서구의 평화운동과의 비교검토 속에서 충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 서구 평화운동의 동력과 추세

전쟁과 침략은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성이다. 인류역사가 제국주의의 시대로 접어들어 급세기에 이르러 전세기는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세력간의 일대 격전의 장이 되었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위협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애호민중의 투쟁은 현시기 제국주의의 세계전략에 맞서는 강고한 단결로 나타나고 있다. 반전반핵평화운동의 세계적 전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미국의 세계전략은 핵과 미국군대의 해외주둔, 배치라는 형식을 통해서 관철되고 있다. 핵과 전쟁의 위협이야말로 오늘날 제국주의의 세계군사전략을 이루는 중요한 지주이다.

서구에서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이와같은 사실은 분명해진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의 평화애호민중들은 사상·종교·민족의 차이를 뛰어넘어 초강대국의 핵군사전략에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특히, 레이건 정권의 등장 이후, 계속되는 군비확장과 핵미사일의 배치증강은 날로 위기감을 더해갔고 서유럽의 반핵운동은 이에 따라 80년대 초반 수십만이 참가하는 반핵평화시위로 발전하게 된다. 반전반핵운동은 투쟁의 과정을 통해서 이념적·조직적·정치적으로 성장하는데, 이념면에서는 핵의 위력에 대한 단순한 공포와 당위로부터 세계인류의 공존공생을 위한 평화의 쟁취라고 하는 숭고한 양심과 인류애로 발전하였고, 이는 전쟁과 핵의 위력에 대한 단순한 반대로부터 제국주의의 지배와 침략에 대한 전투적 결의로 모아지게 된다.

한편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몇몇 의학자, 과학자와 진보적 지식인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반핵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사

회단체가 속속 결성되기에 이르른다. 정치적으로도 막연한 호소와 청원에서 벗어나 NATO<sup>10)</sup>의 해체, 서독의 국방군 해체, 녹색당의 의회 진출, 핵기지 감시캠프 설치에 이르는 성과를 얻게 된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대된 반핵평화운동은 1982년 6월 제2차 유엔군축특별총회를 계기로 전지구적 규모의 고양을 보인다. 반핵운동은 서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일본·동유럽 국가들, 남태평양 국가들에 파급되어 세계평화애호인들 사이에 확고한 반핵의식을 심으면서 핵동결운동의 승리, 비핵시대의 확산 등의 성과를 얻어나가고 있다.

위와같은 눈부신 성과와 전반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평화운동은 몇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서구의 평화운동은 계급성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구의 평화운동은 서구자본주의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량화된 계급운동의 후퇴를 반영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치열한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서 있지 못하며 절대적 비폭력을 주장하거나 자연상태로의 복귀 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서구의 평화운동대열이 양적으로 확대·강화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주체가 노동계급이 아닌 소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증명된다.<sup>11)</sup> 반평화적 상태에 대한 구조적·계급적 접근이 배제되었을 때, 그것은 자칫 전쟁과 핵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서구 평화운동에서 나타나는 두번째 문제점은 민족성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특히 레이건의 군비확대정책 덕분에) 고조된 반제국주의·반미적 성향은 유럽 제민족의 자주성으로부터 비롯된 의식이라기보다는 핵종주국에 대한 심정적 적대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평화운동이 유럽중심적·핵중심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나 자국의 군국주의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요컨대, 서구의 반전반핵평화운동은 제국주의의 지배와 침략에 대항하는 국제적 통일전선으로서 자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다 확고한 반제국주의운동의 지도체로서의 전망을 갖지는 못한 채 자체의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하겠다.

## 2) 민족해방운동으로서의 평화운동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협은 상존하고, 전쟁의 위협을 막아낼 가능성이 저절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때 평화를 위한 투쟁은 역사적 진보를 위한 모든 투쟁과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

식민지 민족해방투쟁도 평화를 전취하는 투쟁에 기본적인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다. 특히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은 오늘날 전세계적인 반제국주의 진신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전반핵 평화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제와 조건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식민지 종속국에서의 반전반핵 평화운동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것은 제국주의의 침략성이 갖가지 허구적 이데올로기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은폐되고 마치 정치·군사적 대립과 냉전의 지속이 당연한 것처럼 조작되어 온 데 1차적 원인이 있다. 더우기 식민지 종속국에 존재하는 비자주적 독재정권은 정권의 비정통성을 감추어주는 전쟁과 핵공갈 정책이 민중들에 의해서 위협받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역량강화와 제국주의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승리의 쟁취<sup>12)</sup>는 더이상 식민지에서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강점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평화의 문제가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분단 44년간 예속의 역사를 되풀이해온 남한사회에 있어서, 미국의 대소·대북해병참기지로 전락한 이땅에서 반전반핵평화운동은 필연적으로 민족해방운동과 그 흐름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전반핵평화운동은 자주·민주·통일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족해방투쟁과 완전히 결합되고 있다.

### 3) 자주·민주·통일 그리고 평화

한반도에서의 반전반핵운동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를 물리치는 운동이요, 분단을 넘어서는 운동이며, 독재를 물리치고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는 운동이다. 먼저, 평화투쟁은 자주화운동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주둔은 한반도의 영구분단지배를 떠받치는 기반이며 군사력의 배경없이 미국의 대한반도 분단지배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미 한국군의 작전지휘권마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군사력의 뒷받침하에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하여 진행되는 위기와 긴장의 고조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삼각군사동맹체제에 기초하면서 남한을 미국의 영구적 영향권으로 남겨두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조장을 거부하고 전쟁과 핵에 반대하는 평화투쟁을 벌이는 것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는 중대한 반외세 자주화투쟁이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남한사회에 있어 반전반핵운동은 반파쇼 민주화투쟁과 직결되는 투쟁이다.

미국에 의해 종속적일 수밖에 없는 비자주적 군사독재정권은 종주국의 군사전략을 적극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반전반핵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비자주적 정권에 대한 폭로투쟁이며 애국민주세력과 매판사대세력을 구분하는 담보가 된다. 최근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에 대한 현정권의 저자세를 보더라도 전쟁구조가 가져오는 식민지 정권의 예속성과 심화를 엿볼 수 있다.

세번째로, 반전반핵 평화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분단구조를 통한 미국과 독재정권의 정치적, 도덕적 기반을 허물어

뜨리는 것임과 동시에 한민족의 평화지향의 노력을 전세계적으로 알려 나가고 민족의 화해를 통해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다. 특히 핵전쟁이 발발할 때, 당연히 한반도 전역이 관계되는 문제이니만큼,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잇는 통일운동과 반전반핵평화운동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반전반핵 평화투쟁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의 근간을 파헤치고 국민들의 뇌리에 반미의식을 확고히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간 독재정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왔던 냉전·반공이데올로기를 약화시키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는 투쟁이다.

### 4) 평화운동의 내용

그렇다면 한반도에 있어서 반전반핵 평화운동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먼저, 핵기지의 철수와 핵무기의 폐기는 민족생존과 평화를 보장하는 유력한 전제이다.

우리 민족을 몇 번이라도 말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남한 땅에 계속 배치되어 있다면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이미 그 파괴성과 비인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핵무기를 한반도에서 추방하는 것은 반전반핵운동의 중심내용이다.

둘째로, 한반도의 전쟁구조를 평화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한국전쟁이 끝난지 35년이 지나도록 잔존하고 있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남북간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상호감축에 돌입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인류의 번영을 바라는 세계평화애호민중의 한결같은 바램이다.

세째로, 주한미군의 철수, 군작전지휘권반환등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자주적 국방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주한미군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의 길을 여는 핵심적 문제와 관련된다.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고 식민지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식민지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은 철수되어야 한다. 외국군의 철수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자주적인 나라에 남의 나라 군대가 주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한미군의 문제가 자주국방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군작전지휘권 반환이나 방위비 분담요구 철폐를 위한 투쟁은 보다 광범위하고 대중적인 위치에서 지금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매년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유세계 최대의 핵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의 본질을 밝혀내고, 이의 공개를 요구하는 투쟁은 중요한 평화운동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는 반전반핵평화투쟁은 한반도에 참다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며, 미국의 대한반도 식민지배정책에 일대 동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는 또한 민주주의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을 매개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의 정착으로 민족대단결과 화해의 드높은 기운을 열어 민족의 평화통일의 진로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또 세계평화애호민중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2.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군축의 방향

이삼열

(기사원 평화군축운동정책협의회 발제, 1990)

### 1. 평화와 통일의 우선순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니면 평화보다는 통일을 우선적으로 달성할 목표로 설정해놓고 이를 위한 평화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가는 80년대 통일논의와 오늘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어 있다. 평화와 통일은 사실상 불가분리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치 선택적으로 그중의 하나를 우선적으로 골라잡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언제부터 생겨났다. 이것은 특히 남한의 통일방안들이 통일보다는 평화정착을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해 놓고 교차승인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상호불가침조약을 통해서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는데 주로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평화정착 우선의 통일방안은 남한정부의 거듭된 변명에도 불구하고 두개의 한국으로 안정되게 분단한다는 분단고착화의 정책이라는 비판과 비난을 거듭받게 되었다. 이렇게 두개의 국가로 안정되게 분단되고 나면, 사대강국과 유엔마저 축복하는 가운데 두개의 체제와 국가가 한반도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게 되며, 이렇고나면 통일의 길은 상당히 오랫동안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었다. 이것은 동서독의 1972년도 기본조약을 모델로한 일민족 이국가의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이며 분단의 고정화 정책 일뿐 통일은 오랫동안 포기하는 방안이라고 비판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남한측 통일방안이 가진 결정적인 결함이었다. 북한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통일방안은 어쨌든 연방제라는 방안을 통해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국호를 지향하고 있는데 남한의 방안은 두개의 국가와 두개의 국호로 유엔가입을 주장하고 있어 외견상 보기에도 북한의 것보다 통일지향적이 못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

이런 약점을 보완키 위해 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통일방안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5공화국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보다는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두개의 국가로의 영구분단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통일민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수립을 최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의 핵심은 2단계인 남북연합에 있다. 남북의 두 나라가 상당한 기간 동안 Common Wealth(복지공동체) 비슷한 연합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남북의 연합이 체제연합인지 국가연합인지는 성격이 분명치 않다. 쉽게 이해하자면 두개의 주권국가로 남북이 있으면서 서로 특별한 교류와 협력의 관계속에 복지적인 공동체를 형성해가자는 정도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서 어떻게 3단계인 하나의 국가형성으로 가게되는지, 또 언제쯤 어떤 조건 하에서 통일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계획과 설명이 없다. 따라서 이 방안 역시 통일보다는 우선 평화정착에 목표와 관심을 두는 방안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사이에 평화정착하면 통일을 하지 말고 평화적인 관계만을 이룩하는 방안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되었다. 즉 남북이 서로 싸우거나 공격하지 말고 그대신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여 두개의 국가로 사이좋게 살아가자는 방안이라는 인상이 굳어졌다. 여기에 따라 평화는 곧 반통일(反統一)이라는 동식이 만들어졌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괴상한 논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통일논의에서 평화우선이나 통일우선이라는 논쟁이 생기게 되고, 평화

와 통일을 모순의 관계, 내지는 선택적 관계(alternative)로 보게 된 원인과 배경이다.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이렇게 보게된 다른 동기는 한반도 밖에서의 두가지 모델을 경험한데서 연유했다고 하겠다. 즉 이차대전 이후의 분단국이었던 세나라는 한국과 월남, 독일이었는데, 월남은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한대신 통일을 이룩했고, 독일은 통일을 포기한 채 두개의 국가로 있는대신 평화를 이룩했다는 사실이 한국의 경우에도 평화를 택하거나 통일을 택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규정된, 통일이나 평화나의 양자택일적 물음에서 진보적 인사들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면 그건 통일이지 통일도 안되는 어중간한 평화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물론 통일을 기피하려는 많은 사람들, 현상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보수적 인사들은 서슴지 않고 통일보다는 평화가 우선이라고, 역시 양자택일적인 주장을 하게 되었다. 독일의 모델을 놓고 한국의 경우는 절대로 동서독의 관계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바로 동서독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독일은 평화를 선택한 대신 통일은 포기했었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에 들어와서 상황은 달라지게 되었다. 독일식 방안은 분단의 영구화가 아니라, 평화적 관계를 통해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까지 실현될 수 있는 모델로 급작히 변모하게 되었다. 평화우선의 모델은 반드시 통일목표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두개의 국가로 평화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분단의 고정화나 영구화는 아니라는 주장이 독일의 상황변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는 아무도 독일식 방안은 평화우선의 기능주의적 모델이기 때문에 반통일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서 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될 것인가? 여전히 독일식 방식은 분단고정화며 반통일이니 따를 수 없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평화를 통해 통일을 가져오는 길이니 따르겠다고 해야 할지 고민스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마도 독일의 모델을 모방하여 통일방안을 만들었던 정부쪽에서는 대대적으로 독일식 방식을 선전하며 따르려 할 것이고, 운동권에서는 여전히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니 참고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펴기 쉬울 것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과연 평화란 것이 무엇이며 평화를 실현한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물음일 것이다. 여기서 평화의 개념이나 의미규정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평화의 포괄적이며 동적인 개념을 살펴본다면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나 전쟁을 하지 않고 현상을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평화연구자들의 논의에 의하면 평화는 평정(pacification)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까지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우선적으로 해야겠다는 사람들이나, 독일식 모델을 평화정착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평화의 개념을 평화정착으로, 즉 평정(平定)으로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제까지 정부가 내놓은 통일방안은 평화정착안이지, 진정코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 평화를 실현하는 방안은 한반도에서 평화의 체제를 구축하는 길이다. 평화의 체제란 것은 전쟁과 폭력의 원인이 되는 공격성과 증오심, 무력의 대결을 없애야 할 뿐 아니라,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수립해야 이뤄지는 것이다. 남북이 불가침조약을 맺고, 상호인정하며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는 것은 현상을 안정화(stabilize)시키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산가족이 오가고, 경제협력과 학술교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에서는 평화정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평화는 아니며, 평화의 체제에서는 더우거나 멀다.

남한에는 계속 미군이 주둔하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고,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북한을 적으로 놓고 대대적으로 행해지며, 북한에선 조소합동작전과 대남작전이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남북이 서로를 적으로해서 국가예산의 1/3 이상을 전쟁준비에 쓰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평화라고 부르며, 아무리 남북교류가 시행된다해도 평화정착이라고 하겠는가? 따라서 이제까지의 통일방안은 평화실현의 방안이



없는 반평화적 분단과 대립의 항구화며, 평화의 실현이 아닌 위장평화의 정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력대결의 폐기와 군비의 감축이 없는 평화정착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상태나 냉전의 지속일 뿐이다. 말로는 평화통일이었지만 실제로는 반평화적 대결과 분단의 지속이었다.

그러므로 평화가 우선이나, 통일이 우선이나는 물음은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분단과 대결상태의 안정과 유지나, 평화를 실현하는 통일이나의 물음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진정한 평화의 실현, 평화체제의 수립이 통일에 반대된다거나 통일에 모순이 된다는 논리를 수긍할 수가 없다. 평화의 실현이 무력대결이나 적대감의 해소와 갈등의 극복을 의미한다면, 한반도에서의 평화실현은 반드시 통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평화를 통일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실현이 곧 통일의 실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면 독일의 경우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독일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을 수립한 이래 동서독간의 평화적 관계의 수립과, 또 유럽의 평화유지를 위해서 분단과 두개의 국가를 감수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통일이 아닌 이 상태를 완전한 평화라고 보지 않았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분단의 상태를 완전한 평화의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장벽을 쌓아놓고 동족간에 장벽을 넘는 형제를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는 상태가 평화의 실현일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장벽이 무너짐으로써 평화는 보다 완전하게 실현되었고, 따라서 통일의 길이 앞당겨 열리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전에도 여러번 독일의 모델에서는 그들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는 분단의 유지나 2국가론을 배울 것이 아니라, 평화의 실현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는 통일과 모순이 아니라, 평화의 진정한 실현이 곧 통일이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우리는 평화의 실현없이 평화의 체제를 수립함이 없이 통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필요가 있다.

## 2.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의 의미

7·4공동성명은 남북간에 통일의 원칙으로 평화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평화통일은 이제 북에서는 평화통일(조평통)위원회로 남에서는 평화통일 자문위원회로 통일기구의 명칭이 될 정도로 당연한 정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북에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평화실현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과 대안이 나와 있지 못하다. 아직도 양측은 자기쪽 안보전략에 입각해 상대방의 무력을 감축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평화안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북쪽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외치면 남쪽에선 땅굴을 파지 말라고 대응하고, 북에서 틴스피릿훈련 중지를 요구하면, 남에서는 북쪽의 군부대 전진배치를 트집잡고 나오는 것이 상습화된 평화공세의 단면들이다.

말하자면 1972년 7·4공동성명이 있는 뒤에도 한반도에서는 평화문제가 한걸음도 진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대결의식과 군비가 엄청나게 증강됨으로써 평화는 더 위협을 당하고, 반평화적인 구조만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제가 총량에서 크게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최신예무기와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엄청나게 크다. 60년대만 하더라도 F-5프리돔 화이터나 F-4판통기를 가지고 있으면 최신예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몇년에 한번씩 새로운 신예기가 개발이 되고, F-16, F-111, 신종을 거쳐 이제는 F-X차세대 전투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으면 권력이 약해서 안되겠다고 야단이다. 한대에 수천만불씩이나 하는 전투기를 몇대만 갖추려해도 수억 불이 소모된다. 그래서 70년에는 3억불이었던 연간 군사비가 80년에는 30억불(2조원)로 늘어나고, 80년대 말에는 1백억불(7조원)로 늘어나서,<sup>3)</sup> 사실상 연간 수출액이 5백억불에 달한다지만 외화가득률을 20%정도로 볼 때에 우리는 1백억불이란 수출이익을 몽땅 군사비에다 바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보

다 규모가 다섯배나 작고, 수출이 형편없는 북한의 경제가 여기에 맞서느라 허리가 부러질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렇게 군사비를 늘리고 무기와 전투력을 엄청나게 증강하면서, 말로만 긴장완화와요, 평화정착이요 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남북대화나 대통령 담화문에선 항상 평화를 추구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최근에는 평화협정이나 군비축소까지 내세우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북쪽에 비해 월등히 우세한 전력을 확보할 때까지 군비를 증강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바꾸지 않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정치가들이나 군사전략가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힘의 우세를 통한 평화”(Peace with superior forces)라는 원칙과 교리(doctrine)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북의 도발과 전쟁위협을 막기 위해 훨씬 우세한 전력과 무기를 갖추므로써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 정책이 남한에 있는 한 북한에서도 무력을 증강하지 않으면 남한과 미국의 군사력에 밀려서 안보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 없게 된다. 남쪽이 F-4기대신에 보다 성능이 우세한 F-16기를 도입하면 북쪽도 할 수 없이 Mig-21기 가지고는 안되고 Mig-23이나 그 이상의 요격기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무엇보다도 남한에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군대와 전술 핵무기들이 있는 한 북한이 두려워하고 위협을 느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한미합동 군사훈련인 틴스피릿이 매년 남한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아무리 방어용 훈련이라고 변명하지만, 미군이 20만명이나 본토에서 날아와야 되고 오키나와나 괌에서 뜨는 B-52전폭기에는 핵무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포항에서의 상륙작전은 원산이나 청진의 상륙을 가상하고 실시되고 있다는 북한측의 비난들을 어떻게 방어용이라고만 할 수 있는지 모른다. 북한사람들의 말로는 틴스피릿 군사훈련은 마치 사람의 코 앞까지 칼을 들이 밀고는 장난이지 진짜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과 같다고 한다. 이 훈련으로 위협을 받는 북한쪽은 불가피하게 군부대의 전진배치로 실전에 임하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말로만 긴장완화나 평화정착을 외치고 실제로는 군비의 강화와 전력의 우세를 도모하는 위장평화의 전술은 폐기되어야 하며, 실제로 긴장완화와 대결의 해소를 이룰 수 있는 평화정착적인 군비의 통제와 감축(arms control and reduction)을 실천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사실 이제까지의 남북대화나 평화통일방안의 제안에 있어서 남한측이 가졌던 커다란 약점이 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수 있는 평화의 방안을 내놓지 못한 것과, 군비감축에 있어서 북한보다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에 있다.<sup>4)</sup> 남북대화에서 그것이 적십자회담이든 국회회담이든 총리회담 예비회담에서든 남한측은 항상 교류와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서 신뢰가 형성되면 그 다음에 군축문제를 거론하자는 입장이었고 북한에서는 항상 군축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면 당연히 신뢰가 생기게 되고 교류도 이산가족의 재회도 통일도 속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남북한의 군축제안은 그것이 선전적 차원에 불과했다는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이 숫적으로도 월등히 많은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지난 30여년 동안 북한측은 약 236회에 걸쳐 군축제안을 해왔다고 한다.<sup>5)</sup> 그러나 남한측은 1970년부터 1988년까지 29회에 걸쳐서 군사문제에 관한 제안을 했다.<sup>6)</sup> 북한의 제안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주한미군의 철수였다. 그다음이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와 남북의 군사력을 각기 10만명선으로 감축하자는 것이었다. 8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3자회담을 제의했고, 87년 1월에는 남북의 고위급 정치군사회의를 제안했으며 양측의 무력감축, 군비경쟁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대규모 군사연습 중지 등을 제의했다.

특히 87년 7월 23일에는 한반도의 군축실현을 위한 다국적(multilateral) 군축협상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① 남북한의 무력을 1988년부터 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10만명선으로 줄이고 ② 주한미군을 이와 병행해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핵무기를 철거하는 것과 ③ 무력축소의 내용을 상대방과



전세계에 알리며 ④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데, 이를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중립국 감시위원단을 읍서버로 참관시킨채 군축협상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이 제안을 하면서 87년 말까지 병력 10만명을 일방적으로(unilateral) 감축하여 실천의지를 보이겠다고 했다. 이제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내놓던 것을 남북의 군축과 함께 병행시키는 것으로 바꾼 것이 큰 변화라 하겠다.

군축에 관한 북한측의 가장 포괄적인 최근의 제안은 88년 11월 7일 정무원과 최고인민회의 중앙인민위원회가 연합으로 결의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 평화실현방안」이다.<sup>9)</sup> 이 방안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실현을 위한 4원칙을 주장하고 있는데 ① 통일지향적 평화 ② 외국의 무력철수 ③ 남북의 군비축소 ④ 남북한과 미국 당사자간의 협상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 제안은 또 구체적 미군 철수와 군축의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핵무기의 90년까지 2단계 철수, 미군의 91년까지 3단계 철수, 그리고 북과 남의 병력을 89년말까지 40만으로, 90년까지 25만, 91년까지 10만으로 감축하고, 무력도 핵무기, 화학무기부터 폐기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제안은 군축뿐 아니라 상호비방과 대결의 중지, 다방면의 합작과 교류, 평화협정과 불가침선언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남한의 미군철수나 감군뿐만 아니라, 북한측의 군축도 함께 제안하고 있으니 의도야 어떻든 한번 군축협상과 회담을 해보자고 호응해 줄법도 한 일이었다. 회담에 응한다고 당장에 군축이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2~3년 안에 미군과 핵무기를 모두 철거하고 남북한 군대를 10만으로 감축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현실적인 제안임으로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미국과 남한측에서는 속눈썹 치고라도 한번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북측의 군축회담 제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본적이 없다. 북한을 적으로서가 아닌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겠다는 88년의 7·7선언에서마저도 남북교류와 협력, 이산가족의 재회, 재결합을 주장하면서 긴장완화나 군비축소의 제안은 한마디도 없었다. 남북의 인적 물적 교류협력뿐 아니라, 군사적 대결의 종식과 무력의 감축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남한의 개방된 통일논의와 자유로워진 통일운동에서 높아지게 되자.<sup>10)</sup> 88년 10월 18일 노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는 군비축소와 군사문제도 남북정상 회담에서 논의하자고 했고 4대국과 남북한의 6자가 모여서 동북아평화협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89년 9월에 국회에 내놓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남북연합의 단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협의해 실시하자고 제안되었다. 대체로 남한측의 평화안과 군사문제에 대한 입장은 교류와 협력대화를 통해 신뢰구축을 먼저 한뒤에 군비통제와 축소를 시도하고, 평화협정도 맺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군축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북한측이 더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에 성급하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남한에서는 항상 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을 이룩하려는 북측의 전술이며 음모라고 규탄했고 거부해왔다. 그러나 만약 참으로 북한측이 군사적 도발로 적화통일을 할 무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남한측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군비축소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군축을 주장했어야 할 것이다. 군축을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긴장완화와 평화의 방안이 어디에 있는가? 필자가 보기에 북측에서 그토록 군사적 대결해소와 군축에 우선적 관심과 성급함을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군사력이 남한이나 미국에 비해 열세에 있고, 뒤진 경제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더 열세가 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속히 군사적 대결이나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 한미일의 삼각군사동맹이나, 환태평양 군사훈련(RIMPAC) 같은 것이, 페레스트 로이키와 일방적 군축을 감행하는 소련의 정책과 달리, 아세아 태평양권에서 군사적 우위와 제압을 이룩한다 할 때에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열세를 넘어서 군사적으로도 위기에 이르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불안하고 위기를 느끼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나 미사일의 개발에 나설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한세대이상 요원한 것으로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고로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단계에서 우리측이 북측의 군축제의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전쟁의 위험도 줄이고, 남북대화나 교류협력도 촉진시키는 일거양득의 잇점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참으로 전쟁을 통해서 북과 대결하고 통일할 생각이 없다면, 군축회담을 연기하거나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미군의 철수나 핵무기를 철거하는 대신 우리는 북한측에다 우리보다 우세한 공격용 무기들, 탱크나 전투기, 잠수함 등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요구하면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도 그렇고 민족의 경제와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남북의 군사적 대결의 해소와 군축은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은 것이며,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교류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뤄야 할 일이 아니다. 또 사실 무기를 감축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진정한 신뢰가 구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남북대화와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군축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오늘의 한반도 상황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1) 군축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2) 군축은 상호불신하는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첩경이 된다. 3) 군축은 전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남북간의 통일을 촉진시키고 앞당길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다.

### 3. 남북한의 평화협정과 군축의 방향

한반도에서 평화의 체제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 군축이라면, 이제 남북한의 군사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군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군축자체에 대한 회의(懷疑)가 많았기 때문에 군축의 방안이나 개념에 관해서 정부든, 학계에서 든 준비해 놓은 것이 별로 없다. 혹간 군축에 관한 논문이나 학술회의들이 최근에 있긴해도, 한반도에서 군축은 아직 이르다거나, 비현실적이라거나 북의 남침준비 때문에 안된다든가의 이론이지 과감하게 군축을 시도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별로 없다.<sup>11)</sup> 군축론이라기보다는 군축연기론이라 하겠다. 그러나 남한측에서 군축론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다.

최근 정부에서 유럽식 군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다.(동아일보 4월 19일자). 정부는 이제부터 남북한 군축문제에 적극대처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유럽식 군비통제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미국방차관인 월포워츠는 4월 19일 미의회에 주한미군의 병력재조정계획을 제출했는데 3단계에 걸쳐 감축해서 앞으로 10년 뒤인 2천년에 가면 한국 군이 한국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92년까지 주한미군 7천명이 감축되는 대신 한국군 2개 보병사단 신설, 포병 1개 여단 증설, 전자정보대대 창설, 30여대의 F-4기 도입 등이 이뤄진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면서 얼른 느끼는 것은 2천년까지는 통일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이 10년 동안에도 북한이 오퍼하지 않도록 한반도 전체의 군사균형을 주시하면서 병력재조정을 책임있게 해나가겠으며, 90년대에도 한반도는 가장 위험한 지역의 하나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했다.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다시 병력주둔의 재강화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미국방차관은 한반도에도 유럽식 신뢰군축과 군축협상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상호간의 자료교환과 군사훈련 참관단의 교환이라고 한다.

필자는 군사문제의 전문가도 국제정치 지식 가진 것도 아니어서 전문적으로 여기에 논평하거나 군축의 대안을 내놓을 능력이 없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심을 가진자로서 군축의 원칙적 문제들은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군축의 문제를 미국의 국방부와 의회에다 맡기겠는가 하는 것이다. 왜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의회는 포괄적인

공공, 사회  
인본 미크  
동간 남한  
62-하단



한반도의 평화론과 군축론을 만들지 못하는가이다. 정부의 유럽식 군축안 적용이라는 것도 2천년대까지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허용하며 보완하려는 제스처어라는 인상밖에는 주는 것이 없다. 2천년대까지 핵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비무장지대의 군사화는 그대로 둘 것인지,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조약은 맺지 않을 것인지 전혀 논의가 없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군축에 관한 논의와 협상에 앞서서 진전되어야 할 조건은 한반도의 안보와 군사전략 문제를 한국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남북한의 정치군사 회담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사문제 해결에 있어서 줄곧 주장하는 대로 「평양-워싱턴」의 축을 「서울-평양」축으로 바꾸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외교안보연구원의 최영교수는 주장하고 있다.<sup>8)</sup> 그는 군축회담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서울-평양」축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대미 3대과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것은 1) 주한미지상군이 보유한 핵무기(SNF)의 철거 2)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반환 3) 미국의 대평양 방위비를 한국이 분담하는 것의 회피 등이라고 했다. 이런 점으로 보아 한반도 군축논의에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국방문제에서 남한이 자주성을 회복하는 문제라는 것이 분명하다. 군축과 평화협정의 문제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지 않으면, 한국국민의 의사와 희망이 반영될 수 없으며 군축과, 평화 통일은 2천년대가 넘어설 때까지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제부터 한반도에 적용한다는 유럽식 군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 방안의 골자는 「신뢰구축 후 군축협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신뢰구축 방안(Coconfidence Building Measures)을 먼저 실천하고 나서야 군축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스톡홀름 방식으로 알려진 유럽의 신뢰구축 방안이란 1만 3천명 이상의 병력과 300대 이상의 전차가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42일전에 통지한다는 것과 훈련 참관단을 서로 초청한다는 것 등이다. 유럽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군사훈련의 사전통보나 참관단 초청으로 신뢰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이런 조치만으로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럽에서는 이 스톡홀름협약이(1984년 1월 7일부터 86년 9월 22일까지 12회에 걸친 유럽군축회의를 통해, 체결되기 이전에 여러가지 선행된 안보조약과 군축협약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 국가들간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 유럽의 33개국과 미국 캐나다가 함께 1973년부터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를 통해 75년 「헬싱키 최종합의서」(Helsinki Final Act)를 채택한 것이다. 현존하는 국경선을 존중하고 상호간에 불가침을 약속한 헬싱키 조약이 없이 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참관단 초청만으로서 동서유럽간에 신뢰구축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유럽에서는 미소간에 전략무기 제한협상(SALT)이 진행돼 1972년에 1차 협정이 체결되고 79년에 2차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장 위에서 중거리 핵무기 폐기조약(INF)이 1987년에 체결되었고, 미소 주둔군을 감축하는 협상안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지금 신뢰구축방안이라고 하는 군사훈련 사전통보와 상호참관을 협의하고 결정할 토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위해서도 남북한과 미국 등이 참여하는 군사정치회담이 열려야 하며, 최소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간의 불가침조약을 어떤 형태로든 실현시키며, 비무장지대를 비군사화시켜서 신뢰구축과 평화군축안을 협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와 유럽이 다른 것은 유럽은 2차대전을 종결했고 한반도에서는 아직 1950년의 한국전쟁이 종결되지 않고 전쟁의 위험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다. 전쟁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국경선이나 안보선이 불분명하며, 군비증강이나 신예무기 도입, 전쟁준비는 마음대로 경쟁적으로 하면서,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신뢰구축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군비를 더 이상 증대하지 않겠다던가 도발

하지 않겠다는 보장이나 약속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한반도의 전쟁상태의 종식이며 하루속히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북한측은 휴전협정 당사자라는 명분으로 미국측과 협상하면서 남한을 배제시킬 것이 아니라, 남북한과 미국이 함께 조인하는 평화협정을 맺어야 할 것이다. 남한측을 평화군축협상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그 이후의 평화통일방안을 협의할 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남북의 불가침 선언과 미·북한의 평화협정을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의 협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따로 불가침조약 따로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한반도의 평화보장안이 마련되면 주한미군의 철수나 핵무기 철거, 남북한 군비감축을 협의하고 진행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때는 남북한의 공동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균형된 감축이나 단계적 철수 등이 실현될 수 있는 토대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남북간의 긴장이나 전쟁도발의 위험한 상태에서 너희가 전력이 우세하고 공격용 무기가 많으니 먼저 감축하라고 서로 상대방의 군축을 제안하는 싸움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평화협정이 안된 상태에서 누가 외군철수나 핵무기 철거, 군비감축을 먼저 하려고 하겠는가? 그러므로 남북한의 정치군사회담을 속히 열어서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의 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 조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어떠한 군비증강도 무기추가 도입도 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남·북의 군비를 동결시키는 협약을 해야 할 것이다.

미군의 철수와 핵무기 철거를 포함하는 한반도의 군축은 평화협정이 마련되면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평화협정 이후의 군축협상을 통해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에 남북한의 병력과 무기를 어느 선까지 제한하느냐는 문제는 남북한의 공동안보와, 통일된 한국이 주변강대국 사이에서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계산하면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북한측이 제안하는 남북한 병력 10만으로의 감축은 현실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40만선을 제안하기도 하나<sup>9)</sup> 이것은 지금 고정시킬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참으로 전쟁과 대결을 하지 않고 평화체제를 실현시키며 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가 남북한과 강대국에게 있느냐하는 문제다. 이러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군축은 않더라도 안보의 위협을 구실로 군비를 증강하는 조치만은 양측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시급한 군축의 방안은 무엇보다 무기, 병력, 전술, 훈련에 있어서 군사력의 증강을 막는 것이라 생각된다.

- 1) IISS의 국제전략연구소의 보고
- 2) 尹正錫, "남북한의 군축에 대한 기본입장과 군축안 비교", 「한반도 군축론」(고대평화연구소 논총 3집) 1989, 199페이지
- 3) 이기택, "남북한 군축문제",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 이론과 실제」, 1984, pp. 523-532.  
하영선, "한반도의 군비축소 방안",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1989, pp. 90-92.
- 4) 윤정석, 위의 글, pp. 195.
- 5) 노동신문, 1988년 11월 8일 보도
- 6) 1988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의 8·15뎛세지 참조.
- 7) 이호재 편, 「한반도 군축론」, (고대평화연구소편), 1989.
- 8) 최 영, "한미 안보체제 조정과 남북한 군축", 「한반도 군축론」, (고대평화연구소 편), pp. 321.
- 9) 최 영, 위의 글, pp. 326.



### 3. 주한미군 감축 전망과 한미안보관계의 재편

한겨레사회연구소 국제팀

(대학정론 제18호, 1990)

최근 1월말 한미 양국에 의해 발표된 '3개의 주한미군 공군기지 폐쇄'조치는 우리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의문을 가져다주었다.

우선은 그동안 민족민주운동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는 제일의 원흉'이라고 규정되어지고, 민족자주화 실현의 관건적인 요소로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전개해왔기에 비록 부분적이지만 '순순히 물러나간다'는 식의 이번 조치는 놀랄만하다.

그러나 사고를 한차원만 더 높이면,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는 80년대 이래로 '핵전쟁을 불사하고라도 지켜야한다'는 '사활적 이해상관지역'으로 격상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에는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내포되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따라서 본고는 이번의 조치가 갖는 의미와 앞으로 전개될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감축 전망을 밝혀보고, 이를 통해 한미안보관계는 어떻게 재편되어 나갈 것인가를 한반도 정세와 연관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 미공군기지 폐쇄

지난 1월 29일 체니 미국방장관이 상원 연설에서 '해외주둔 미군기지 일부 폐쇄 및 미군 철수'에 대한 의회보고가 있는 직후, 국방부(한국)는 다음날인 30일 '주한미공군 기능통합 및 기지 재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골자를 보면 첫째, 현재 군산·오산·광주·대구·수원 등 5곳에 분산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공군 전력을 평상시에는 오산 및 군산기지를 중심으로 운영토록 재조정하고 대구·광주·수원기지를 유사시 미 증원전력의 전개를 위한 한미공동작전기지로 유지시킨다.

둘째는 이같은 주한미공군의 기능통합 및 기지 재조정과 관련, 현재 주한미공군이 수행하고 있는 RF-4C기의 정찰기능은 이 정찰기를 한국이 새로 도입하여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현재 대구기지에 있는 RF-4C기는 철수한다.

셋째는 주한 미군기지 기능 재조정과는 별도로, 주한미공군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오는 9~10월경 F-16 1개세대(16대)를 창설한다는 것등이다.

이같은 계획은 91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대략 92년 중반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78년 카터정권의 주한미군 철수 이후 주한미군이 병력규모와 전력면에서 끊임 없이 증강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그 의도자체가 어떠한 일반국

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조치가 한 국측의 막대한 분담비용과 전력증강으로 연결되어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환경 조성에는 별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없는 것이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3곳의 보조기지를 폐쇄하고 유사시 한미 양국의 공동작전기 지로 한다는 것은 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한국측이 이 기지의 시설·유지 비용을 전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미 군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한미 양국이 '양해서'까지 교환한 바 있는 '전시주둔국 지원협정'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둘째, 이 조치와 연관된 막대한 무기도입과 전력 증강을 들 수 있다. 이번에 추가도입기로 한 RF-4C기는 그 기종의 낙후성으로 인하여 미국내에서 퇴역 중임 에도 불구하고, 이미 88년부터 미국측과 협의되어 국방예산의 무기도입비에 반영 되었다.

또한 F-16 1개대대의 창설 역시 그 비용도 상당할 뿐 아니라, 막대한 전력증 강을 가져올 것이다. 작년 11월, FX사업의 일환인 FA18기 1백 20대 합작생산을 결정 한 바 있기에,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은 한반도에서의 가공할 군비증강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셋째는 이번 조치로 비전투행정요원 2천여명의 철수가 예상되는데, 이 숫자는 현재 4만 4천여명의 주한미군의 5%에 불과한 인원일 뿐 아니라 전력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발표 내용에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미지상군에 대한 감축이 포함되지 않았 을 뿐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관련된 한반도 배치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 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의 조치는 전세계적인 평화·군축의 추세와 미국내의 국방비 삭감압 력에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된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만 대폭 가중시키고 말았다.

#### 집권구상과 맞물려

최근 일련의 한미간의 군사당국자들의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행정 부는 올 4월 1일까지 1) 한국 및 동북아에서의 미군의 임무와 체계 및 배치, 병 력수준에 관한 재평가, 2) 주한미군의 부분적이고 단계적인 감축 등에 관한 1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년-워너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한다.

올 2월의 임시국회에서 그 통과가 확실시되는 '군조직 개편안'에 따른 국방참 모본부의 창설이 그것이다. 이 구상은 한반도에서의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실천가능한 전력체제로 바꾸고자 하는 미국측의 의도가 주요한 측면이기도 하지 만, 장성지의 대거신설에 따른 군내부 파벌의 불만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집권 구 상을 시도하는 현정권의 의도도 맞물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민 정·공화·민주당의 3당합당인 '보수대연합'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도를 창출하 고자 하는 움직임과 연관된 것이다.

둘째는 주한미군의 감축문제인데, 이는 우선 한미간의 연합전력에 차질을 가져 오지 않는 비전투 행정요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주한미지상군의 감축은 92년 이후의 협상과제로 미루고 있으나, 이 역시 한국측이 얼마만큼 방위 비 확대를 통한 전력증강을 가져오느냐는 점과 미·북한간의 외교접촉 및 북방 정책의 성과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

70년대 이래로 미국의 한반도 구상의 또하나의 축인 '교차승인' 구도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미국과 현정권은 그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작년 11월 차관보의 방북과 그 직후에 있었던 5차 접촉, 최근 1월의 6·7차 외교접촉등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권 역시 대북방정책, 특히 소련과의 관계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주한미지상군 문제와 관련하여, 2월 14~17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 미 제2사단의 경량화와 배치 문제이다.

현재 비무장지대에 배치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미제2사단은 점차 경량화된 경보병사단으로 전환하고(이는 미국의 제3세계 반혁명전략인 저강도 전쟁 전략에 따라 기동성이 요구되는 신속배치군으로서의 역할변경을 의미한다). 그 배치도 한국 중부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그대신 한국군이 비무장지대를 맡게 되며, 미국은 지상군감축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때 최소한의 핵관리병력을 전쟁의 자동개입을 위한 인계철선으로 남겨두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그 진행 속도와 규모를 결정지을 것이다.

세제는 한국측의 방위비 부담문제이다. 작년의 제2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측은 이미 연합방위증강사업(CDIP)에 90년에는 총 7천만달러, 91년에는 8천만달러, 92년에는 9천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최근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통하여 그 폭을 대폭 확대시키고 있다.

이번의 한미국방장관 회담의 제1차적인 목적도 이 점에 두어질 것이다. 작년 11월, FX사업의 일환으로서의 FA18기종의 선택 과정이나 합작생산의 범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네제는 한국민들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이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인데, 미국측은 한국측이 용산기지의 토지가와 이전비용을 전액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한미행정협정(SOFA)이다. 이 문제 역시 한미국방장관회담의 주요의제 가운데 하나인데, 한국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예상된다. 또한 용산기지의 중부이남인 대전 근교로의 이전은 그동안 한국민들에 의해 정치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반미투쟁을 격화시킨 일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무마시킨다는 측면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보다 거시적인 동북아 방위로 전담시키고자 하는 측면이 결합된 장기적인 포석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간의 지휘체계 재조정 문제이다. 이는 현재 한미연합사 개편계획과 맞물린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것이다. 현재 한미양국 정부는 미국측이 갖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평시에는 한국군이, 전시에는 미국이, 그리고 양국군 합동훈련시에는 한미연합사(미국측)가 각각 관장한다는 내용의 단계적 작전통제권 이양방안과 또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공군 및 방공군사령, 조기경보체제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평시에도 한미연합사령부, 즉 미군이 행사하고, 지상군 등 나머지 부대는 한국군이 통제권을 행사하되 전시에는 모든 군에 대한 통제권을 미군이 행사한다는 내용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어떤 방안도 미군에 의한 한국군의 통제력 관철에는 변함없을 것이다. 현재의 국방참모본부의 신설도 역시 이러한 작전통제권 이양에 대비한 조치라고 말하지만 미국측은 국방참모총장에 대한 각종 통제장치를 통하여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수하려 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의 감축 전망은 미국의 동북아 방위전략의 차원에서 재조정되는 문제이지 한국민의 전민족적 요구와 이해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 미국의 동북아 전략

유럽에서의 군축 열풍이 동북아지역까지 불어닥칠 것인가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이 지역의 정치지형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중국

적으로는 이 지역의 힘의 역관계상 미국의 기득권이 그 주도적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은 장차 예상되는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과 이 지역의 반전반핵평화애호민에 의한 평화정착 및 군축 요구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처지속에서, 현재 그 전략적 우위가 지속될 때 그 기본적인 재편구도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최근 일본은 방위력을 증강하고 자위대의 기본전략을 기존의 방위주에서 전진방어 전략으로 전환하며, 자위대의 해외파병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올 5월달경 미 캘리포니아로부터 하와이에 이르는 태평양전역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인 RIMPAC(환태평양훈련) '90에 한국과 일본이 공식참가하기로 하여 이는 보다 급속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올 3월부터 시작될 탐스퍼리트 '90이 비록 참가규모를 5%정도 줄인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공할 핵전쟁을 가상한 대규모 군사훈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군축에 역행되는 처사이다.

그럼에도 최근 베트남의 캄란만기지에 주둔해 있던 소련군이 철수하는 등 약간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미상원군사위 위원장인 웬렌의 최근 증언에 의하면 북한도 전력의 감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실토하는 것으로 보이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군축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역시 '두개의 한국정책' 실현을 위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한반도에 있어서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 정권도 국방부 산하에 군비통제기구를 설치하여 북한의 정치·군사회담 여부에 적극 대응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방을 위협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한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군사전략인 '억제전략'이 포기되지 않는 한 실제적인 전략의 감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완전군축이 쉽게 달성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미국측의 세계전략상 필요한 조치로서 진행되는 주한미군철수의 의도를 진정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완전군축 실현을 통한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자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성숙한 역량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4. 남한의 군축안과 문제점

발제 : 평화연구소 김창수

(기사원 평화군축운동 정책협의회 발제, 1990)

#### 1. 최근 군축논의의 배경

90년대가 군축의 시대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군축에 관하여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남한 정부도 마침내 말을 텠다.

88년 6월 10일 제3차 UN 특별군축총회 연설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이 한반도 군축 3단계 안을 제안한 이래 88년 10월 18일 유엔총회와 89년 9월 정기국회에서 군사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는 등 6공화국 등장이래 간헐적으로 군축문제에 대한 초보적인 언급이 있었다. 군축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주한미군의 부분적 형식적 철수가 발표된 시기에 즈음한다.

90년 1월 11일 이상훈 국방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내 군비통제실에서 남북한 불가침 협정 및 평화협정 체결, 군사적 신뢰구축,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3 단계를 거친 뒤 90년대 후반에 감군 등 상호군축을 실현하는 4단계 연도별 군축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90년 2월 8일 미상원 군사위에 출석한 메네트리 주한미군 사령관은 남북한은 정치협상을 통해 감군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탠포드대학 국제전략 연구소와 서울대 국제문제 연구소의 공동연구팀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반도 군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오던 중 지난 2월 9일 10년안에 주한미군을 완전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군축보고서를 정부 측에 제출했으며, 2월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 태평양소위의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리처드 솔로몬은 한반도에서 유럽식 군축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월 9일자 동아일보에 의하면 정부는 미소정상회담때 거론할 것에 대비하여 '남북한 신신평 후협상'의 원칙 아래 유럽식 군축안을 마련하고 이를 북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처럼 붓물터지듯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한반도의 군축문제에 대해 90년도 벽두부터 미국과 남한정부가 법석을 떠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전세계적인 군비확장 추세가 데탕트 체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둘째로, 재정적자와 무역 적자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이의 해결을 위한 기회를 포착했고 아울러 주한미군 철수 등 계속되는 남한의 반미투쟁에 의해 형성된 미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미해정부 입장의 반영이다.

셋째, 해양해전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제2 전선을 형성하려는 미국의 전략상 한국내 미지상군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 미지상군의 부분적·단계적 철수는 미국의 동북아 군사구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넷째, 둘째와 셋째의 이유로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상황을 북한과 협상에 이용하여 대북협상

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남한정부의 계획이다. 남한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군축문제에 대해 만회하며 나아가 정상회담으로 연결하여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데탕트의 필연적인 흐름을 통해 실질적인 동북아 군사구조에 변화가 미치지 않는 선에서 도덕적·정치적 명분을 확보하고 유럽식 군축모델을 도입하여 두 개의 한국을 추구하는 정책의 적극적 공세이다.

#### 2. 남한정부의 군축안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남한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질 90년대의 주한미군철수라는 군사정세의 변화를 대북협상카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북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군축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기본원칙은 유럽식 군축안에 바탕을 둔 '신신평 후협상'이다.

우선 유럽식 신뢰구축 장치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자.

유럽 35개국이 참석하는 유럽안전보장회의 (CSCE)는 75년 헬싱키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조성된 국경선과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유럽의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할 것을 골자로 하는 헬싱키 최종 합의서를 채택하고 이어 83년 CSCE 마드리드 재검토 회의와 84년 스톡홀름협약, 89년 빈 재검토회의를 거쳐 89년 3월 신뢰안전보장구축 고섭과 유럽제택식 전력 고섭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합의된 신뢰구축장치는 (1) 주요한 군대의 기동력 연습 사전통고, (2) 읍저버의 교환과 군사요원의 상호방문 (3) 주요한 군대이동의 사전통고 (4) 군사기구, 주요한 병력전개 등에 관하여 매년 광범위하고도 포괄적인 정보교환 실시 (5) 군사독트린, 전술교리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 등이다.

이러한 유럽식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신뢰구축방식은 (1) 특정규모 이상의 기동훈련이나 부대이동은 상호사전 통보 (2) 훈련참관단의 초청 의무화 (3) 주요 군사기지와 고통중심지에 대한 감시반 상주 (4) 수시로 양측 군사요원이 현장검증 (5) DMZ의 실질적 비무장지대화이다. 아울러 유전협정의 남한쪽 주도적 제외와 북한의 핵무기 독자개발 중지와 핵안전협정 가입 촉구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한 쪽에서 군축문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안기부, 통일원, 국방부 군비 통제실과 최근 신설된 총리실 산하 안보정책 실무단과 외무부 군축과이다.

아직까지 정부의 군축안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사항이 아니므로 정부측의 목표와 원칙, 그리고 세부적인 안은 몇가지 자료를 통해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정부측의 군축의 목표와 '기본원칙인 '신뢰구축 후협상'의 대원칙 아래 안보 정책실무단 단장인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의 견해를 빌린다.

첫째, 상호균형된 최소 안전수준의 준수방어 전력유지를 목표로 한다.

둘째, 기습공격 및 공세작전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공격용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감축. 폐기한다.

셋째,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양적으로 우세한 측이 먼저 감축하여 불균형을 시정한다.

넷째, 상호간 감시 및 검증제도를 확립하여 이 일환으로 국제 감시위원회를 설치한다.

다섯째, 주한미군은 남북한간의 전력균형상태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와함께 제시될 수 있는 세부적인 정부측안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2원화하여 지상군 지휘체계는 한국군이, 공군의 경우에는 미군이 분담하고 정전위원회 수석대표를 한국군이 담당하며 한미 연합사령부의 한국측 부사령관의 지위를 강화하고 통합군 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 등일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과 불가침선언 체결을 통해 주변 4대국에 의한 안전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 3. 군축 논의의 문제점

첫째로 유럽식 모델에 따른 신뢰구축 장치 우선은 현실성이라는 이름아래 동북아와 한반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유럽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라는 일원화된 군사구조가 존재하며 양쪽의 병력이 모두 지상군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동북아의 군사구조는 다원화되어 있으며 지상군 중심의 소련과 해.공군 중심의 미국이 서로 다른 군사체제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위 전략이 관철되는 남한에서 이점은 유럽과 무시할 수 없는 차이이다.

또한 유럽의 모델은 상이한 국가들 사이에서 형성된 것인 반면에 남과 북은 동일한 민족으로서 통일을 절박한 과제로 안고 있다. 유럽의 헬싱키 문서는 2차대전 이후에 형성된 정치적 현실을 인정하여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고자 했던 것인데 이를 분단된 한반도에 적용할 경우 자칫 분단현실을 인정하고 고착화하는 길로 나갈 수 있다.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절박한 문제이다. 우리는 유럽과 달리 통일의 절박성을 안고 있다.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장애물이 군사적 대립구조면 이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 방안의 모색이 남북의 군축이 되어야 한다. 유럽의 군축이 급진전해가된 본질적인 이유가 장기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고르바초프의 일방적 군축이었다는 점을 파악한다면 신뢰구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절박한 민족적 과제 앞에서 얼마나 한가한 발상인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긴장상태를 계속 유지해온 이유는 신뢰구축 장치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상호간에 무력증강을 금지하고 정치회담의 조속한 소집을

명시한 휴전협정은 일종의 신뢰구축 장치이다.

남북한의 신뢰구축은 상호 군비를 감축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통해 급진전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군비축소와 군비통제는 그 개념이 다르다. 군비축소는 실질적으로 군비를 줄이는 것이며 군비통제는 군비의 운용을 조절,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군비축소는 무기로부터의 안전이며 군비통제는 무기를 통한 안전이다.

현재 남한 정부측의 군축안을 입안하는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군비통제의 개념에서 군축을 제시한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군사구조를 인정하거나 또는 임시피리트 훈련의 격년간 실시, 10% 축소 등의 정부측 논의에도 불구하고 신뢰구축 장치를 검토하고 있던 시기에 T.S 90을 강행하고 나아가 판택평양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등 전력 증강을 향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서 북한과 군축협상에 임하려는 기본태도를 분명히 잃을 수 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는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과연 북한을 적극적으로 군축협상의 무대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군축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북한의 휴전선의 군사력 전진 배치의 공세적 전략의 일환이지만 이는 임시피리트 83부터 실시된 공지전 독트린이라는 공세적 방어전략과 관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넷째, 항공기에 대한 구체적 감축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공지전 독트린과 항공기 탑재 경계관제체제 등 항공기 정보탐지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항공전력을 군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기습공격 및 공세작전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무기부터 우선 감축 폐기한다는 임동원 안보정책 실무단 단장이 제시하는 원칙과도 위배된다.

다섯째, 주한미군 철수가 남북한의 군축을 위한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의 보완책으로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라는 논리를 사용하여 도리어 군축에 역행하는 전력 증강을 도모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 4. 맺음말

최근의 군축논의는 40년이 넘는 군사적 대결구조를 자기 역사에 품어온 한반도 민중에게는 그 자체로서 무척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간의 안보는리가 군사영역의 확고부동한 성역을 구축했던 이유로 군축에 대하여 감히 접근조차 못했던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 놀라운 전환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군축논의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도리어 논의과정에서 한.소, 한.중, 북.미, 북.일 의 상호승인과정을 거쳐 분단 체제로 국제적으로 승인 받는 과정으로 나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점이다. 분명히 못을 박아야 하는 점은 군축은 남북한의 상호 변화와 발전을 통하여 통일로 가는 길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5. 최근 북한의 평화보장 대책에 대하여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

(노동신문, 1980.11.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가 11월 7일 평양에서 있었다. 연합회의에는 중앙인민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 정무원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의정,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보장 대책에 대하여'를 상정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며 평화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연합회의는 우선 안팎의 정세를 평가하고 나라의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데 대하여 일치하여 확인하였다. 연합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통일은 4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실현되지 못하고 여전히 민족의 숙원으로만 남아 있다. 그동안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기울여 온 우리 인민의 노력과 투쟁, 그에 바쳐진 정력과 희생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나라의 통일을 위한 민족적 염원과 지향은 항상 첨예한 정세의 도전을 받아왔다. 나라가 분열된 후 북과 남은 끊임없는 대결과 전쟁의 위협속에서 4반세기 동안이나 대화없는 암흑한 단절의 시기를 보냈으며 70년대 이후에 마련된 대화들은 극도에 이른 불신과 무력충돌의 위협속에서 성과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평화가 없이는 대화를 성공시켜 나갈 수 없으며 나라의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없다. 조국의 통일이 긴박하면 할수록 평화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어야 우리 민족을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문제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비추어 조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일관하게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재발을 막으며 불완전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합리적인 평화제안을 내놓았으며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첨예한 군사정세를 완화할 긴급대책을 취할 것을 거듭 제의하였다. 다

# 政府 「유럽式軍縮案」 마련

南北韓 先 신뢰 後협상 원칙

## 北에 협정 제의 방침

**신비구축 방안**  
**기동훈련 사전상호확인**  
**추진전략**  
**군사기지의 감시단 파견**  
**DMZ 실질적 非武装化**

북한은 유럽식 군축안을 마련하고,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방침이다.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 美蘇정상회담때 거론 대비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 南北韓 상호신뢰가 출발점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유럽 35개국 20년간 공들인 작업  
 韓半島 적용 가능할지 미지수  
 유럽 「1萬3千명 이상 軍事활동」 42일전 봉고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북한은 이 안을 남한에 제안할 때 '신뢰를 먼저 쌓고 협상을 한다'는 원칙을 밝힌다.



우리는 성실한 평화노력의 표시로 여러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병력을 축감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조치도 취하였다.

우리당과 공화국정부의 평화에호적인 입장과 노력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현실은 우리의 일관한 평화에호적인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오늘 안팎의 정세는 복잡한 흐름속에서도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각계각층 인민들의 조국통일기운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평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 있다. 광범한 계층이 남조선에서 미군과 함께 핵무기를 철거할 것을 주장해 나가고 있으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불가침선언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와 평화통일에 대하여 말도 할 수 없었던 남조선에서 이제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되돌려 세울 수 없는 토대로 되고 있다.

국제적 조류에서도 사회주의 나라들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완화의 국면이 열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선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기세찬 조류앞에서 오늘날에 와서는 남조선의 집권자들도 조선반도의 평화문제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종군 싫건 그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연합회의는 이러한 환경속에서 최근 남조선 당국자가 유엔총회에서 한 발언에서 군사문제를 협의할 용의를 표시한 사실에 유의하였다.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남조선이 역대 집권자들은 평화에 대하여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평화제안을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평화를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실제로는 반대하여 왔다. 그들은 남침위험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북남대화에서 군사문제를 협의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남조선의 현당국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와 마주앉아 군축과 불가침선언에 대하여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그 진의는 어쩔든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사태발전이다. 남조선당국자의 이와같은 의사표시가 비록 때늦은 감이 있고 아직은 막연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우리의 인내성있는 평화제안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조선측이 조성된 정세와 민족의 절박한 염원에 맞게 우리와의 평화협상에 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때나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진실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입장에서 협상마당에 임한다면 의심할 바 없이 평화의 길은

열리게 될 것이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는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선택여하에 달려 있다. 지금이야 말로 북과 남은 수십년동안 민족의 머리위에 무겁게 드리워진 전쟁의 위험을 가시우고 평화를 위한 전환적인 국면을 과감하게 타개해나가야 할 때이다. 평화에로의 귀중한 새출발이 목전에 이른 오늘 북과남은 응당 공동의 평화강령으로서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이한 근본원칙과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함께 확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보조를 같이 해나가야 한다.

연합회의는 이러한 입장으로부터 우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의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평화보장 4원칙을 새롭게 제기하였다.

#### -- 평화보장 4원칙 --

첫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평화는 결코 그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두개의 조선으로 분열을 고정화하기 위한 평화로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민족에게는 평화도 귀중하지만 통일은 보다 더 귀중하다. 이른바 평화 정착이라는 관판밑에 두개의 조선조작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을 위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따라서 평화는 반드시 통일지향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둘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외국무력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우리나라의 절반땅에 외국군대가 틀고 앉아있는 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으며 외국무력을 그대로 두고 평화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공담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외국무력의 철수에의하여서만 공고히 담보될 수 있다.

셋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북과남의 군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북과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무력은 쌍방이 다같이 무거운 부담으로 될뿐 아니라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또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경쟁적인 무력증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 절대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북과남 사이의 무력충돌을 막자면 쌍방이 선의의 입장에서서 군비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력을 최소한도로 줄이며 상대방에 대한 공격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에서 외국무력을 철수시키는 것과 함께 북과남 사이에 균형있는 군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항구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넷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긴장격화의 요인은 조선반도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그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 조선



의 북과남이다. 조선반도안에 있는 전쟁의 화근을 외면하고 조선문제의 토의에 이력저력한 나라들을 끌어들이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당사자 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 4원칙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원칙이며 평화문제를 우리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있게 하는 공동의 이정표이다. 북과남이 이 평화보장원칙을 함께 확인하고 그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평화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가장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연합회의는 평화보장 4원칙에 기초하여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연합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에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문제가 가장 큰 장애로 되며 이 문제의 해결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연합회의는 완화와 평화에로 나가는 현 추세는 남조선에서 미국무력의 철수를 더는 미룰 수 성숙된 요구로 상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현존 무력의 단계적인 축감과 당면한 정치, 군사적 대결상대의 완화를 예비하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였다.

#### -- 평화방안 --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 1) 미군무력의 단계적인 철수

(1)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 말까지): 1단계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 말까지): 2단계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2) 미국은 남조선 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 말까지): 1단계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 진해개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 말까지): 2단계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단계(1990년 말까지): 3단계에서는 해,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3)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4)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기술, 기체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1) 북과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육전대 병력부터 먼저하는 원칙에서 1991년 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 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 수준으로 축감하며,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2) 북과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 축감에 맞게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이 축감되는 시기부터 외부로부터 군사장비 반입을 중지한다.

(3) 북과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 군사조직을 해체한다.

##### 3) 미군 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1) 미군무력의 철수 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2)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게 한다.

##### 4)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3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공히 북남사이의 쌍무적 회담도 할 수 있다.

(2)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성원인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스웨덴의 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을 확인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 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 2. 북과남사이의 당면한 정치,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 1)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 (1) 북과 남은 호상 비방, 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비락살포와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인방출을 중지한다.
- (2) 북과 남은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정당단체와 개별 인사들의 쌍방사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사내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 이용하여 상품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교역과 과학기술, 문화, 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공동협력을 실현한다.

###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 (1) 북과 남은 쌍방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한다.
- (2)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연합부대 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이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대와 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 (3)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 (4)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위군사 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 3) 북남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 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을 따로 할 수 있다.

연합회의는 이상의 포괄적 평화방안이 북남사이에 조성된 첨예한 대결과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평화 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고 핵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되며 전쟁의 온상으로 간주되어온 조선반도는 안전한 비핵평화지대로 전환될 것이다. 수십년동안 지속되어온 북과 남 사이의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결의 역사는 끝장나고 우리나라에는 화해와 신뢰와 단합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것이 온 민족에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새 희망을 안겨주게 될 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는 완화와 평화를 구축하는 시대의 추세와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를 바란다는 염원과 그리고 군축을 비롯한 군사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남조선 당국자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서 그들이 한 말의 진실성 여부를 가려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의 완화와 조미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문화분야의 부분적인 교류와 외교관 접촉, 식료 및 의약품 판매 등 극히 제한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조선문제 해결에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우리나라의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도 유엔무대에 가서 군축을 하고 불가침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한 말이 진실이라면 구태의연하게 미국에 안보협력을 요청하거나 그 무슨 국제적 환경조성에 낯을 돌릴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나라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연합회의는 우리의 확기적이며 현실적인 평화방안이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와 미국·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과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마련되고 그것이 성과적으로 추진되면 북남 쌍방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위업을 성취하는 길에서 북남최고위급 회담은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으로 된다. 북남최고위급 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와 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문제와 같은 기본문제들이 협의될 것이며, 그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획기적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연합회의는 북남최고위급 회담을 마련하는 데에서 쌍방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이 회담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연합회의는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이 또한 국회회담을 전격시킴으로써 경제회담과 적십자 회담을 포함한 여러 갈래의 대화를 계속 하는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외세가 없고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조국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곧 반세기동안이나 간직되어온 우리 민족의 숙원이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이 절박한 민족적 숙원을 앞에 두고 이제는 누구도 빈말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되며 대화를 가지고 민족의 운명을 희롱해서도 안된다.



조국통일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말보다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세계가 공인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불변의 조국통일원칙으로 확고히 하고 이를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원칙을 구현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연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다."

연합회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우리 민족은 이제 머지않아 통일의 열망으로 부풀어 오른 1980년대를 보내고 20세기의 마지막 연대에 들어설게 된다. 1995년은 조국해방 50돌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해야말로 더 이상 조국통일의 과제를 넘겨서는 안 되는 중대한 역사의 개선으로 되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조국통일의 기치말에 굳게 단결하여 대결과 분열의 역류를 이겨내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조국해방 50돌을 받드시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위업을 성취하고 거룩의 희망을 실현하는 역사적인 전환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연합회는 통일조국의 탄생을 맞이할 역사의 그날을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민족이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격조적인 대열에 한결같이 펼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연합회의는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아세아와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각국 정부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나라의 통일의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노력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끝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성취하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하여 회의참가자들의 일치한 찬동말에 새로운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제의를 담은 편지를 미국정부와 남조선 당국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연합회의는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는 아세아와 나아가서 세계평화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각국 정부들과 평화애호인민들이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나라의 통일의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노력에 굳은 연대성을 보내주리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 6. '90년 평화군축운동의 의의와 기독교운동의 실천방안

기사련

(기사련 평화군축운동 정책협의회 발제, 1990)

### 1. 현시기 평화. 군축운동의 의의

1 - (1) 전후 냉전구조의 유산인 '알타체계'의 해체와 함께 현재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 평화. 군축의 기류속에서 동북아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세계적 탈냉전 물결의 규정하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냉전질서의 해체는 대단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역으로 한.미.일 집단군사동맹체제가 강화되고 한국과 일본의 군비가 확대되는 반작용이 주요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첫째, 유럽과 달리 동북아에서는 이데올로기 대립이 뿌리깊게 조장되어 왔고,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정치. 군사적 긴장관계가 강고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럽과 달리 지역내 평화운동 역량이 대단히 취약하고 지역내 국가간 군축협상의 경험과 사색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셋째, 유럽의 집단군사동맹체제가 냉전질서의 해체 추세에 따라 유럽내의 정치적 기구로 성격이 점차 변화하는 데 반해 동북아의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종속적 군사관계 속에서 미태평양군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아래 동맹국의 군사력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전영간 대립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고있는 한반도에서 한국전쟁 종전 40년이 지나도록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잠정적인 휴전의 상태로 긴장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군사적 대치 상태가 더욱 강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주한미군이 단순한 대북 억지력을 넘어서 핵전력을 포함한 대소 대항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동시다발 보복전략에 따라 남한에 대소 공격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은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이다. 요컨대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이 세계적인 냉전해체가 아직 동북아에서 현실화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인 것이다. 이는 거꾸로 전후냉전의 최후 유산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군축과 통일의 기운이 고양된다면 이는 비단 한민족뿐 아니라 전세계 인류를 위해서도 뜻깊은 역사적 진전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

1 - (2) 88년 2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과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의 남북학생회담 제의로 불붙기 시작한 통일운동은 그간 민족통일과 민족대단결 의식의 고취, 민중적 민족통일 방안의 대충적 확산, 정치군사적 문제의 광범위한 제기, 각계의 자주교류운동의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이루면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실천과정을 통해 통일운동이 결과적으로 자주교류운동의 수준으로 협소화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NCC 총회의의 조선기독교도연맹 초청 좌절 등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다 본질적인 군축과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불가침선언, 핵철폐 등의 정치군사적 측면을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하고 지배세력과의 대치전선을 명확히 세워내지 못하였다.

80년대 통일운동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 오류를 극복하는 90년대의 통일운동은 평화군축운동의 적극적 전개를 통해 통일운동의 대중화, 풍부화를 기하고 국제 정세에 편승해 반북이데올로기의 확대와 교차 승인등을 통해 고착화하려는 정권의 음모를 폭로 저지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기운을 드높여야 할 것이다.

### 3. 현 시기 평화, 군축운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세계적으로는 전후의 압타체제가 무너지며 평화의 기운이 드높아지고 있고 민족적으로는 분단 45년, 한국전쟁 4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1995년 통일 회년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서 한국교회와 선교적 과제인 민족 통일의 기반을 보다 확고히 조성하고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존'이라는 인류사적 대의를 우리 역사 속에 구체화하기 위해 이땅의 애국 기독교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실천하여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평화, 군축운동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다.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이며, 남북간 긴장과 대결의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평화이며, 미국 의 세계 군사전략 구도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되찾음으로써 민족의 생존을 수호하는 평화이다. 즉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구조의 실현이 한반도에 있어 평화운동의 목적인 것이다.

평화, 군축운동은 이를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군사적 대립구도를 제거하고 적대적 군비경쟁을 중지시키며 반평화 세력인 제국주의와 군부를 약화시킴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의 토대를 굳건히 세우는 운동인 것이다.

한반도에 이러한 평화, 군축운동의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1) 1953년 이래 우리 민족에게 존전쟁상태를 강요하고 있는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휴전협정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이 실현되어야 한다.

- 2) 한반도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군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협상이 즉각 시작되어야 하며, 남북한 병력과 병기의 감축, 외국주둔군 -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주한미군의 역할과 비중을 생각할때, 미군 철수문제는 한반도의 군축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핵심적 사안의 하나인 것이다.

- 3)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한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뿐 아니라 세계 핵전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한반도에 존재하거나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는 폐기, 철폐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가 국제적으로 합의되고 천명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일체의 공격적 군사훈련의 즉각적 중단, 예비군 등 준군사조직 (예비병력)의 철폐나지 축소, 국방비의 대폭적 감축과 민중생활 개선예산으로의 전용, 신종 무기구입의 중단, 축소 등 이땅의 평화 실현을 위한 해결과제는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한국전쟁이후 40년간 이땅에 누적되어 엄청난 모순을 해결하기위해 미국과 남북한의 정부는 즉각 책임있는 노력을 진행시켜야만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이 땅의 민중들이 적극 평화, 군축운동에 나서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이는 평화, 군축운동에 있어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군축의 관계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 군축의 핵심적인 고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물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한 한반도 군축의 실질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가 단선적으로 강조될 때,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주한미군의 단계적, 부분적 철수

(=군살빼기)의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명분으로 한 남한의 군비증강노선을 합리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 철수 까지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실질적 군축과 평화협정체결, 핵무기 철폐를 이뤄내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기초위에서 평화, 군축운동의 원년인 올해, 평화, 군축운동을 전민족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대중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제안한다.

- 1) 이제 40주년이 되는 금년 6.25를 맞아, 불안정한 휴전체제를 종식하고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6월 18일 - 25일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선포한다.



이 주간에 각계에서 한반도 평화. 군축 촉구선언을 발표하며, 기사력과 애국적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전국 각지에서 6. 25 40주년기념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또한 6월 24일을 평화. 군축주일로 지키고 공동기도문 혹은 공동설교문을 배포한다.

- 2)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3대원칙을 남북이 합의하여 발표한 7. 4 공동성명 발표일을 기념하는 평화 대행진 (걷기대회)을 광범한 평화 애호세력이 총 걸집하여 공동 개최한다.  
이 대행진을 통해 군축과 미군철수, 핵무기 철폐 등을 현 시기 전민족의 요구로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 3) 평화. 군축운동에 광범한 교회와 대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실천 프로그램과 대중선전물을 적극 개발. 보급한다.  
평화. 군축 주제 포스터, 비디오, 슬라이드 등 다양한 대중 선전물과 개교회 청년회, 여신도회의 평화. 군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대중이 참여하는 평화. 군축운동이 되도록 한다.

( + 프로그램, 선전물 개발의 주체 구성 )

이러한 실천계획들을 일정별로 배치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 4월 : 실천계획 수립, 추진주체의 형성
- 5월-6월 : 평화. 군축운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작업 ( 여론화. 대중선전 )  
- EYC. 목협. 교회여성연합회 등 과 단체가 분담하여 포스터, 슬라이드, 비디오 등 다양한 대중선전물 개발. 보급 및 프로그램 조직화.
- 6월말 - 7월초 : 6. 25와 7. 4를 계기로 한 대중행동기간. 평화. 군축을 본명한 국민적 요구로 부각
- 8월 중순 : 범민족대회. 남북 공동기도주일 통한 평화. 군축 선전  
( 이때 국회 및 U.N.총회를 겨냥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수도 있을 것 )
- 9월 정기국회 : 한반도 비핵지대화 ( 및 군축 ) 을위한 결의안 제출
- 10월 : U.N. 총회 대책

XXX. 실천계획 ( 안 )

| 기사연 ( 및 회원단체 )  | 교 계   | 민족민주운동 일반  |
|---|---|--|
| 5월말: 교계 간담회<br>( 6월행사 주체적참여 조직화 )                       |   |  |
| 6월초: ( 평화군축 주제 포스터. 순회사진전. 대중선전. 기타 )                   |   |  |
| 6월 18-25일: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기도주간                            |   |  |
| 1) 기독교계 ( 목회자. 교회여성 등 )                                 | 평화. 군축요구성명발표                                  | 6월중순 : 성대에서 군축심포지움<br>전청대협 지역 집회   |
| 2) 6.25. 40주년기념 휴전체제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군축실현을 위한 기독교 대회 ( 기도회 ) |   |  |
| 3) 목협: 6.24 평화군축 주일설교문 배포                               |   |  |
| 4) EYC: 개교회집회 조직화                                       |   |  |
| 7.4: 평화. 군축 촉구대행진 ( 걷기대회 ): 범민주단체 연대                    |   | 7.7: 전대협-조선학생위 공동성명 발표일<br>7.20: 전대협 국토순례 대행진<br>7.27 )<br>7.27: 휴전협정 체결일<br>8.15: 범민족대회 |
|   | 8.6: 교회여성연합회 평화대회<br>8.12: 남북공동기도주일 ( 내용 추동 ) | 9월초: 군축자료집발간 ( 평연 )  |
| 9월 정기국회 비핵. 군축 결의안 제출                                   |   |  |
| 10월 UN 총회: 분비 ( 단독 ) 가입 반대운동                            |   |  |



### III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의 제과제

## 1. 주한미군과 자주국방

정 시 진

(한미관계제인식1, 두리신서, 1990)

### 1. 머리말

한 나라가 자주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자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군사가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정치에서의 자주권도, 경제에서의 자주권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음을 역사적 경험들은 잘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기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유지하고 보위하지 못한 채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것은 민족자주의 견지에서 볼 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미군이라는 외국군대가 수십년 간 주둔해 있으며, 또한 군사작전지휘권을 미군이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적 현실 역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장애로 자리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배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비롯한 각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한미군의 존재야말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히 보장하는 근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땅에서는 민족의 자주화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며, 이로 인해 민주화와 통일의 가능성조차도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그리고 이같은 민족적 예속의 근원은 군사적 예속이라는 물리적 토대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같은 군사적 예속상태를 청산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일이 선결적인 과제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 자주권을 획득하고 자주국방을 이룩하는 일은 단지 군사적인 차원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의 자주화, 민주화, 그리고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미군주둔의 득실을 따져보고 나아가 자주적인 국방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한미군의 역사와 배치현황

한반도 남쪽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 역사적 근거는 일본패망 이후에 외부로부터 주어졌던 불완전한 해방,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지배와 이로부터 낳아진 민족의 분단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놓여있던 한국은 해방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한반도를 군사기지로 해서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일본인의 본국소환을 목적으로 했던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각각 주둔하게 되었다. 하지만 명분만 그럴듯했을 뿐 이는 실제로 2차세계대전후 세계분할을 결정한 알타와 포츠담협약에 따른 분할

점령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 남쪽을 자신들의 지배권에 강제로 편입시키기 위해 3년간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미군주둔의 역사가 '합법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1945년 9월 9일에 하지(John R. Hodge)중장 휘하의 미국 제24군단이 한국에 진주한 것이 전후 최초의 주한미군이었다. 이때부터 시작해 1948년 8월 15일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6·25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주한미군은 그 규모와 장비 등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보였지만 한국군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 기초를 다졌다.

우선 주한미군의 역사를 살펴보자. 주한미군은 45년 9월에 처음으로 진주한 뒤 같은 해 11월에는 병력이 7만으로 증강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종전 뒤 자체국가상태를 평시체제로 전환시켰으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한반정체 결정자들 사이에서 즉각 혹은 점차적인 철수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48년 4월에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공식적인 철군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철군이 시작되어 48년 5월 현재 3만여명에 이르렀던 미군은 7개월만인 12월 초에는 1만 6천여명으로 줄었고, 49년 1월 15일에 미군 제24군단은 재편된 제5연대 7천 5백명만을 남기고 철수했다. 같은 해 6월까지의 제5연대 병력도 철수하고 주한미군사고문단 5백명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약 5년 사이에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수가 철수하게 된 이유는 한국 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방태세를 갖췄기 때문도, 혹은 미국의 국익에 비추어 한반도의 중요성이 감소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정부가 구축하고 있던 국방체제에서 미군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간에 맺어졌던 각종 조약, 협정이 이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군정이 시작된 직후인 46년 1월 한국군의 모체인 「국방경비대」가 미군을 사령관으로 하여 발족했다. 국방경비대의 핵심에 배치된 세력들은 대부분이 일본사관학교, 만주군관학교, 지원병 등을 거쳐 장교로 일본군에 복무하던 자들이었다. 이들 친일세력이 자신들의 죄과를 불문하고 요직에 배치한 미군정정에 충성을 맹세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들의 역할 또한 미군정에 반대하며 나라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방경비대는 출발에서부터 그 구성과 역할에 있어 미국 의존적이고 반민족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군부를 이루고 있는 인적 구성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국방경비대의 각급 주요 지휘체계를 미군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군정 아래에서 국방경비대의 사령관은 당연히 미군이 차지했으며 제1연대장, 그리고 해안경비대 고문 등의 자리에는 미군이 배치되어 있었다.

미군은 국방경비대를 조직, 외관상 자주국방체제를 지원하는 듯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주요 요직에 미군장교들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실제 통수권을 장악했으며, 이 사실에서 한국군이 조직되는 그 순간에서부터 미군이 통수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다.

미국은 국방경비대의 요직에 미군을 배치하여 실질적인 통수권을 장악하는 방법과 아울러 조약, 협정을 통한 통제의 방법도 취했다. 48년 8월 한국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방경비대는



국방군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승만 정권은 같은 해 8월 '잠정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 제2조에서는 미군사령관이 군정통치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계속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50년 7월 15일에 '대전협정'을 체결하여 육·해·공군 전체를 포함한 한국군의 군사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는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만 유효한 잠정적 조치로서 휴전과 더불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휴전 협상 직후인 8월 3일 델레스 미국무장관과의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상호방위 조약 발효시까지 한국군 및 주한미군부대를 유엔군 사령관 지휘권아래에 둔다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어서 54년 11월에는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의사록」에 서명했다. 의사록 제2항에는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국제연합사령부(UN군 사령부)가 장악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미군주둔을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는 54년 11월 18일에 발효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전문과 6조 및 미합중국의 양해사항으로 구성된 이 조약의 제4조 -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 와 제6조 -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식시킬 수 있다" - 에 따라 미군주둔은 무기한으로 가능케 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은 전쟁 직후에 미군주둔과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장악하는 문제를 법제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왔다.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지자 이에 대응해 한미연합사령부가 78년에 창설되었다. 이는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과 권한을 분리해 유엔군사령부를 존속시키는 한편 「한미연합사령부 군사위원회」라는 것을 외양으로 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지휘·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연합사 창설 이후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협정에 관한 사항'만을 관장하고 종래의 지휘계통(미 대통령 → 미 합참의장 → 미 태평양 사령관 → 유엔군 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대통령 → 한미연합사령부 군사위원회 → 한미연합사령부 체계로 개편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상호방위조약에 근거, 주한미군의 합법성을 보장받으며 「합의의사록」(54년 11월)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대통령 및 군사령부는 자신들의 군사병력에 대해서 조정 및 지원의 권한밖에 갖지 못한다.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걸어온 이같은 역사와 역할로부터 한국군은 철저히 미군에 예속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그 병력수는 5만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포괄하고 있는 지역 범위와 분포, 군의 구성 성격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남한 전역을 종합적인 군사기지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한반도의 전략적 지위가 상승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병력수와 군비는 점차 증강하였다. 87년 현재 주한미군의 수는 4만 3천 8백 86명에 이르는데, 이는 해외 주둔 미군병력의 8%에 해당하는 것이고 서독,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수이다.

주한미군 가운데 육군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유일한 지상군인 제8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사령관은 주한미군, 유엔군, 미 제8군의 직위를 겸하고 있으며 한국군에 대해서도 작전지휘권을 행사한다. 미8군 사령부는 서울에 있으며 예하에 제2 보병사단, 제4 미사일 사령부, 제38 방공포병여단, 제19 지원사령부, 제2 공병군, 제2 수송군, 제52 항공대대, 제502 군사첩보대대 등이 있고 병력수는 총 3만 1천 2백 6명이다. 공군은 동경에 사령부를 두고 있는 제5공군 예하의 제314 항공사단을 포함, 총 1만 1천 5백 66명이다. 또한 해군은 전투부대는 없으며 서울의 통합사령부에서 각급 활동을 하는 장교들과 진해의 지원부대, 부산의 군사해상 수송사령부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포함 총 3백 94명이며 해병대 7백 20명이 주둔하고 있다. 또 「미국방정보센터」에서 발행하는 「디펜스 모니터 (Defense Monitor)」지 85년 제2호는 미육군 특수부대가 주둔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주한미군 배치상황





### 3. 주한미군과 한반도의 평화

#### 1) 끊이지 않는 전쟁 발발의 위험성

##### ① 전시체제의 지속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5만에 가까운 미군의 한국배치는 한반도의 전시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반도가 아직도 전시상황이라는 것은 6·25전쟁 직후에 체결된 휴전협정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는 사실을 가리킨다.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은 유엔군 총사령관이자 미육군대장인 마크 W. 크라크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인 팡덕회를 일방으로 하여 조인되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해서는 아무도 참석조차 못했는데, 이는 이미 50년 7월 15일의 대전협정을 통해 한국군의 지휘권이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적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한국당국은 휴전협정의 주체가 되지 못했음은 물론 이를 개정·폐기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휴전협정은 전쟁당사자로 명시된 미국과 북한간에 의해 폐기되고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미국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등에 관한 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협상이 우선'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시상황에서 체결된 휴전협정이 아직도 존속됨으로써 미군의 주둔 역시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휴전협정의 제2조 13항은 신무기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인데, 57년 6월 21일 군사정전위원회에서 국제연합군 대표는 "북한 및 중공측이 이 조항을 무시하기 때문에 국제연합군은 남한에 현대병기를 들여오고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 한국군의 현대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조항은 파기되었으며, 이 때부터 무제한적인 군비증강이 이루어졌다. 또 54년 11월 18일에 발표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2조, 제3조는 무제한적인 무기반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약이 계속 유지되고 이에 근거한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의 이행은 불가능한 것이다. 주한미군과 군비증강은 상대적으로 북한의 중무장화와 소련의 동북아시아 방어망을 더욱 긴장시킴으로써,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 ② 대규모 군사훈련 실시 - 팀스피리트 훈련

1976년 이후 관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팀스피리트 훈련은 미국과 한국당국이 방어용 훈련이라는 설명과는 무관하게 주한미군을 정점으로 한국군, 오키나와·팜 배치 미군, 그리고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 수송된 부대가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규모의 방대함을 놓고 볼 때 이 훈련이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팀스피리트 훈련은 지난 76년에 시작되어 90년도에 15회째를 맞이한다.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이 한반도를 포함한 이 지역의 평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방어용이 아닌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데서 나타난다.

이같은 성격을 입증하는 근거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이 훈련의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방어훈련은 '가상적인 적'의 침공에서 시작해 그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훈련이 진행되다가 마침내 반격에 나서는 시점에서 종료된다. 그러나 팀스피리트 훈련은 가상의 침략을 전제로 하여 최선예의 무장력을 갖춘 대규모 한미연합군대가 장기간에 걸쳐 적을 공격함으로써 적을 섬멸시키는 과정을 내용으로 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요컨대 일반적인 방어훈련은 '침공 → 반격'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팀스피리트 훈련은 '반격 → 섬멸'로 구성되어 있어 훈련의 대부분을 적을 공격하는 데 배치하고 있다.

또 방어훈련으로서의 걸맞지 않게 훈련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라는 점이다. 훈련 초기에는 10일에서 15일 정도 기간동안 실시되던 것이 80년대 들어서는 50여일로 연장되었고, 81년 이후에도 70~80여일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또한 규모면에서도 초기에는 4만 6천명 규모로 출발했으나 84년 이후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실전훈련으로 확대되었다. (<표 1> 참조)

그 훈련의 형태에서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이 지역의 긴장상태를 크게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 아래 수행되고 있다.

##### ③ 민족생존의 위협

8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세계 및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졌다. 82년도 미군사정세보고서에 유럽, 중동, 한국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전략지대로 설정하면서 "이들 가운데 한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은 다른 지대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지원하고 또 지원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80년대 미국의 중추적인 군사전략은 동시다발보복전략 - 역 스윙 전략 - 이었다.

군사력 경쟁과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나온 이 전략은 새로운 핵전략에 기초해서 미국과 동맹국의 역할분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소련과의 분쟁을 전제하고 있는 이 전략은 미국은 핵병기로 핵우산을 제공하고 통상전력(핵병기 이외의 것)의 확대배치는 동맹국에 맡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지역은 물론 적의 약점에 선제공격을 가하여 전투능력의 분산을 피한다는 것이다. 소련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선제공격을 하려는 지점은 서유럽, 중동, 한반도 세 곳이다.

이 전략은 미국의 군사전략이 총체적으로 변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지위가 격상했음을 알 수 있지만, 문제는 주한미군을 근거로 한 이같은 전략이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서구와 함께 미국이 핵전쟁을 공언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같은 전략의 변화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는 핵폭격으로 초토화 되어도 관계없다는 것이다. 변화된 미국의 전략은 주한미군을 전략 수행의 근거로 하면서 한반도를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가 민족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가 되는 첫번째 이유는 이들이 엄청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다. 이미 주한



(표 1) 팀스피리트 76-87

| 기 간                  | 병 력(명)                               | 미군의 주요참가부대   | 주요연습내용   | 일본주변에서의 연습   |
|----------------------|--------------------------------------|--|--|--|
| 1976<br>6.10 ~ 20    | 46,000<br>한국군 40,000<br>미 군 6,000    |  | 상륙작전   |  |
| 1977<br>3.28 ~ 4.13  | 87,000<br>한국군 74,000<br>미 군 13,000   | 주오키나와 제18전술전투함공군, 제9수륙양용여단, 제13해병함공단, 제7함대(항모 미드웨이)                | 상륙작전, 지상공격훈련                                       | 3.22 ~ 26 미일공동대잠훈련 (이스반도 주변)<br>4.27 ~ 30 미일공동대잠훈련 (이스반도 주변)                             |
| 1978<br>3.7 ~ 17     | 104,000<br>한국군 59,000<br>미 군 45,000  | 제25보병사단, 랜스미사일 대대, 주팜 B 52편대, 제7함대(항모 미드웨이) 주오키나와 제3해병사단           | 해군기동훈련, 긴급출격훈련, 상륙작전, 비상할주로이착륙훈련, 도하작전, 랜스미사일 발사훈련 | 3월 중순 미일공동대잠훈련 (오키나와 주변)<br>4.17 ~ 20 미일공동대잠훈련 (이스반도 주변)                                 |
| 1979<br>3.1 ~ 17     | 160,000<br>한국군 104,000<br>미 군 56,000 | 오키나와 해병, 제1해병함공단, 랜스미사일 대대, 제7함대, 팜 B 2편대, 제25보병사단                 | 상륙작전, 대잠작전, 랜스미사일 발사훈련, 출격훈련, 공지합동훈련               | 2.10 ~ 17 미일공동대잠훈련 (서태평양해역)<br>3.13 미일공군공동연습(미사와)<br>3.19 미일공군공동연습                       |
| 1980<br>3.1 ~ 4.20   | 145,000<br>한국군 102,200<br>미 군 42,800 | 제25보병사단, 주 오키나와 해병대, 주 알라스카 공군, 제7함대(항모 미드웨이)                      | 도하작전, 해군기동훈련, 지상공격훈련, 상륙작전, 출격훈련                   | 2.16 ~ 20 미일공군공동연습 (시코쿠바다)<br>3.4 ~ 7 미일공군공동연습(미사와)<br>4.7 ~ 11 미일공군공동연습(미사와)            |
| 1981<br>2.1 ~ 4.10   | 156,700<br>한국군 100,000<br>미 군 56,700 | 제 2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주오키나와 제3 해병사단, 주팜 B 52편대, 제7함대                   | 상륙작전, 도하작전   | 2.2 ~ 6 미일공군대잠훈련 (오키나와)<br>2.24 ~ 25 미일공군공동연습 (큐슈우북방)<br>3.23 ~ 26 미일공군공동연습 (미사와)        |
| 1982<br>2.13 ~ 4.26  | 161,600<br>한국군 100,000<br>미 군 61,600 | 제 2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주오키나와 제3 해병사단, 팜 B 52편대, 필리핀미공군, 제7함대(항모 미드웨이)   | 항모기동훈련, 상륙작전, 도하작전, 화력시범훈련                         | 2.10 ~ 15 미일공군대잠훈련 (오키나와·큐슈우북방)<br>3.2 ~ 13 미일공군공동연습(오키나와)                               |
| 1983<br>2.1 ~ 4.16   | 191,700<br>한국군 118,000<br>미 군 73,700 | 제 7보병사단, 제25보병사단, 제7보함대(항모 미드웨이, 엔터프라이즈), 주팜 B 52편대, 주필리핀 공군       | 도하작전, 해상작전, 기뢰전훈련, 야외기동훈련, 상륙작전, 화력시범훈련            | 1.24 ~ 27 미일공군공동연습 (오키나와)<br>1.25 ~ 30 미일대잠훈련 (큐슈우북방·시코쿠남방)<br>2.1 ~ 4 미일공군 공동연습(시코쿠 북방) |
| 1984<br>2.1 ~ 4월중순   | 207,150<br>한국군 147,300<br>미 군 59,850 | 제 2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주오키나와 제3 해병대, 주 알라스카공군, 주팜 B 52편대, 제7함대(항모 키티호크) | 상륙작전, 기뢰전훈련, 전략공수공중투하훈련, 전투기 전개훈련, 도하작전            | 2.6 ~ 9 미일공군공동연습(시코쿠)<br>2.15 ~ 27 미일공동기뢰전훈련 (關防灘)<br>2.20 ~ 25 미일공동대잠훈련 (보소반도앞바다)       |
| 1985<br>2.1 ~ 4.30   | 209,000<br>한국군 147,000<br>미 군 62,000 | 제 25보병사단, 주팜 B 52편대, 알라스카 공군, 제7함대(항모 미드웨이), 주오키나와 해병대, 특수부대       | 상륙작전, 기뢰전훈련, 전략공수공중투하훈련, 공중공격훈련, 화학전훈련, 도하작전       | 1.28 ~ 23 코프에어리프트(오키나와)<br>2.1 ~ 11 벨리엔트 어서<br>2.14 ~ 23 육상자위대와 해병대의 공동연습(꽃가이도)          |
| 1986<br>2.10 ~ 4.25  | 209,000<br>한국군 139,000<br>미 군 70,000 | 제 25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오키나와 주둔해병대, 필리핀 주둔공군, 팜 주둔 B 52편대, 제7함대(항모 미드웨이) | 상륙작전, 공격작전, 해상작전, 비상이착륙훈련, 지상공격훈련                  | 역자보충자료임  |
| 1987-<br>2.19 ~ 5월상순 | 약 20만                                | 제 25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오키나와 주둔해병대, 필리핀 주둔 공군, 제7함대(항모 레인저)      | 상륙작전, 비상이착륙훈련, 해상작전, 해상공수지원훈련, 화학전 훈련              |  |

미군이 핵무기는 물론 핵운반수단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주한미군에는 적어도 6백50여 개에서 1천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천배의 위력을 갖는다. 83년 5월 미국의 칼럼니스트 앤더슨이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는 항공기용 핵폭탄 1백 33개, 8인치 곡사포용 63개, 155밀리 곡사포용 31개, 핵지뢰 21개가 배치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공식발표(85 미 국방백서)에서조차도 주한미군은 핵탄 325개, 핵포탄 302개, 핵탄두 248개를 포함해서 1천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이밖에도 미국은 '악마의 병기'로 이름난 중성자폭탄(건물은 파괴하지 않은 채 인명만 대량 살상)과 핵전역 미사일 퍼싱 II와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등의 한국배치를 공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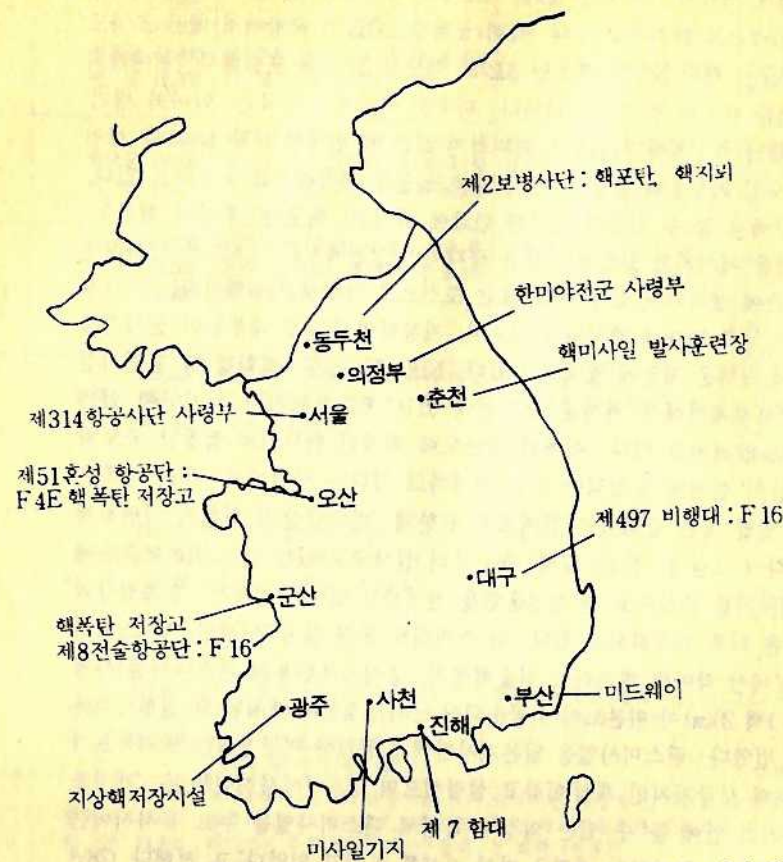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한국에 핵지뢰, 핵포탄, 미사일 핵탄두, 핵폭탄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즉각적인 실전배치를 목적으로 군사경계선 부근에 설치되어 있다. 무선 또는 도선으로 기폭시키는 핵지뢰는 군사경계선의 남측 일대에 배치되어 있으며, 지상핵의 경우도 대부분이 군사경계선에서 가까운 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NBC(핵, 생물, 화학병기) 훈련시설도 군사경계선에서 가까운 동두천에 있는 제2 보병사단 기지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한반도에 비치된 핵무기의 엄청난 규모와 이것들이 실전에 투입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민족은 전쟁 발발 혹은 승패에는 간여조차 못한채 '민족말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림 2) 참조) 둘째, 7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팀스피리트훈련에서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 실전훈련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말살의 위협'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3년째인 팀스피리트 78에서 악마의 병기라는 전술핵병기, 중성자폭탄용의 랜스미사일(사정거리 1백 20km)이 미본토에서 공수되어 군사분계선에 배치된 뒤 실전사격훈련을 벌였다. 랜스미사일을 일본기자단에게 공개한 미군장교는 공격목표가 '최대의 보급기지인 개성'이라고 설명했으며 당시 「아사히신문」은 "개성을 사정거리 안에 들 수 있는 의정부 북방에 랜스미사일을 두고 유사시에는 이 보급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할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전했다. (78년 3월 1일자 보도)

80년대에 들면서 팀스피리트 훈련은 이른바 '공지전 전략'에 입각해 북한에 대한 중심(縱深)공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미육군이 82년 9월에 채택해 83년의 팀스피리트 훈련부터 한반도에 적용한 새로운 전략으로, 전술핵병기를 중심으로 적의 심장부인 평양을 중심공격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 개정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전쟁계획(OPLAN 5027)에서는 공지전 전략을 확립했는데, 여기서는 핵을 중심으로 한 항공화력, 포병화력, 기동부대 등의 3개축이 동원된다. 이 전략 속에는 소형화된 핵병기를 등에 짊어진 핵전문의 특수부대가 북한에 잠입, 심장부의 선정목표에 핵폭탄을 설치한 후 원격제어장치에 의해 폭발시키는 작전이 포함되어 85년 훈련부터 수행되고 있다.

공지전 전략에 입각한 핵전쟁계획은 87년 훈련에서 미국의 핵전쟁지휘기인 E4B가 핵전쟁시 국가최고권한자가 타고 공중으로부터 전세계의 미군에게 핵공격을 지령하는 임무를 수행 - 출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핵전쟁 훈련은 극에 달했다. 최근 몇해 전부터는 화학전 훈련까지 동원되는 입체적



〈그림 2〉 한반도 핵배치현황(주한미군의 핵병기)



인 NBC(핵·생물·화학병기)훈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에서는 '미군기지 방위', '도시방위'라는 명목으로 한미 합동의 화생방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팀 스피리트 '87에서 화학전 훈련이 행해졌다고 보도했다. (87년 2월 19일자)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실전 훈련이 실시된 지 이미 10년이 경과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권리는 철저히 박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극동아시아(태평양) 방어를 위한 전진기지

2차대전 이후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할 때 세계분할 지배정책에 근거하여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미 한국은 소련의 극동아시아 진출을 견제·저지하기 위한 태평양 방어전진기지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이같은 기본입장은 전쟁 직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54년 11월 18일 발효)의 전문에 가장 정확히 나타나 있다.

이 전문은 평화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한미 양국간의 직접적인 해당지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을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유지가 태평양지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평양 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한국은 이 지역을 위한 부속물 즉 미국의 대소 방어전진기지로서의 역할만을 떠맡게 된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80년대에 들어 태평양지역 및 한반도의 중요성이 격상함에 따라 더욱 노골화되었다. 80년대의 주요한 전략으로 등장한 이른바 동시다발보복전략은 한국을 대소방어기지로 보다 분명하게 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동시다발보복전략은 소련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대응 및 선제공격을 하는 지점을 서유럽, 중동, 그리고 한반도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 세계 지역을 '상호 연결되고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된 전략지대'로 부르고 "한 지역에 있어서의 미국의 전략은 다른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을 지원하고 또 지원받아야 한다." (1982년도 미군사정세보고)고 밝히고 있다. 즉 한반도는 미국의 대소전진기지로 가장 중요한 지역의 하나이며, 따라서 주한미군은 이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991년으로 임기만료가 되는 필리핀 미군기지 사용료 및 사용기간 연장협상이 있었던 89년말, 미국은 이 지역의 군사기지를 싱가포르, 오키나와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의 군사기지는 오키나와, 괌, 필리핀 등지를 잇는 극동아시아 방위권의 한 지역이며, 이곳이 갖고 있는 의미는 미 아시아·태평양군사기지의 사령부 역할을 맡고 있는 오키나와기지와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소 태평양방어권의 전진기지 역할만을 맡고 있으므로 이 지역의 평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 2) 주한미군과 한국의 민주주의

### ① 정치군부의 등장과 미국의 역할

미군의 한국주둔이 대소 태평양지역방위를 1차적 목표로 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다른 어떤 이념이나 사상보다 우선시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이같은 상황은 예외가 아니어서 분단 이후, 특히 6·25전쟁 이후에는 '멸공만이 살 길이다', '매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승공이념' 등으로 대변되는 반공이데올로기가 국시로 정착되었다.

한국에서 반공이데올로기는 '북한의 남침위협' 혹은 '전쟁발발 가능성'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이에 따라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치 아래 막대한 군비지출과 함께 군은 비대화되었고 한국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집단이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물리력을 갖게 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는 퇴보를 거듭했던 것이다. 일부 정치군인들은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쿠데타 등의 수단을 통해 탈법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민주화의 움직임을 말살하려 하였다. 5·16에서 12·12, 5·17에 이르기까지 정치군부의 정권장악은 한국의 민주화를 역행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군부의 정치개입은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이 대소 방위기지로 설정되면서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게 되었던 역사적 과정과 무관한 것이



아닐 것이다.

### ② 군사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혹

독재정권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도 민중들의 단합된 힘은 몇차례에 걸친 민주화의 기회를 가져왔다. 60년의 4·19혁명과 79년의 부마항쟁, 그리고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이 그러한 역사적 계기들이었다. 그러나 이때마다 번번히 군사쿠데타가 일어남으로써 민주화의 기회는 박탈되었으며 역사는 퇴보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정치군부가 쿠데타를 감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야 했는데, 그같은 대규모 병력이동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국의 군사작전지휘권은 한미연합사령부 군사위원회, 즉 주한미군이 장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땅에서 대규모 군병력의 이동은 이들의 승인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같은 한미간의 군사작전지휘체계를 놓고 볼 때 그동안에 발생했던 군사쿠데타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를 묵인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 ③ 광주항쟁과 군병력 이동 승인

80년 5월 광주항쟁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민중항쟁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군병력의 이동을 승인함으로써, 한국민의 민주화요구를 외면하고 전두환세력의 동장을 지원하였다.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한지 며칠 후인 5월 22일 미국방성 토마스 로스 대변인은 "존 워컴 주한유엔군 및 한미연합군사령관은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동아일보』 80년 5월 22일)

민주화나 군부독재의 연장이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던 80년대 벽두에 일어났던 광주민중항쟁은 결국 미국의 군병력 이동, 즉 쿠데타 승인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던 것이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분석으로는 이 책에 실린 남상기, 「은폐·조작된 미국의 광주알리바이」를 참조할 것)

### ④ 저강도 지배전략의 전개

미국은 레이건 집권 2기인 1984년에 들어서면서 저강도전쟁 전략을 제3세계 통치전략의 중심으로 세웠다.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개입이 제3세계 민중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됨에 따라 채택된 이 전략은 정치·군사분야에서의 지배와 간섭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를 통해 미국의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 전략은 특히 제3세계에서 민족민주운동 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민간극우집단을 육성함으로써 전체 사회를 보수-혁신 혹은 좌-우대립의 구도로 몰아가면서 민족민주운동을 궤멸시키려 하고 있다. 동시에 군사독재정권을 개량적인 민간정부의 모습으로 개조시킴으로써 독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것을 전략의 또 다른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원래 중남미지역에서 반미운동이 강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를 대상으로

했던 저강도전략은 8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에도 적용되면서 특히 86년의 필리핀 민중항쟁 이후 아키노 정권을 들어앉히는 것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저강도전략은 필리핀 민중항쟁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민족민주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된 한국에 집중적으로 적용되었다. 87년도에 들어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견잡을 수 없이 분출하자 5공화국 정권은 이른바 '6·29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개량적인 민주화시대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바로 미국의 새로운 지배정책인 저강도전략에 근거한 것이었다. 다소 덜 권위적인듯한 정권의 인상을 갖는 차기 정권을 출범시키기 위해 채택된 대통령 직선제는 동시에 정권에 대한 합법성 시비를 종식시키고 미국-군사독재정권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노린 것이었다. 통치체제의 안정이라는 자신들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친미보수대연합의 결성이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90년 1월에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 3당이 전격 야합해 보수대연합(=반민주대연합)을 결성하였다. 국민들의 이념구조를 보수-혁신 혹은 좌-우의 대립으로 치부하기 위한 이같은 정치구도의 변동은 미국의 저강도 지배전략의 적용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같은 저강도전략의 기초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한미군의 존재이다. 한국에 있어서 모든 물리력을 장악한 주한미군의 존재, 즉 군사적인 기초가 없이는 이 새로운 전략의 구사가 불가능한 것임은 물론, 성공적으로 관철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⑤ 퇴폐문화의 산실

주한미군이 파급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바로 신식민지 퇴폐·저질문화의 주요 유입경로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을 위해서 설립된 AFKN(American Forces Korean Network)은 TV라는 매체를 통해 전국적 보도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주한미군들만이 아닌 한국인들도 시청할 수 있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어 미국식 문화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한국 청소년들이 AFKN을 선호하는 경향은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그 내용의 질과는 관계없이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보다는 외래문화를 선호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방송의 주요 내용은 향락적인 소비문화에 편중되어 있음도 커다란 문제가 된다. 현재 한국의 TV방송에서 방영중인 이른바 문화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쇼를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데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선정주의만을 강조하고 있다. 외래·서구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문화프로그램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 주한미군을 위한 방송인 AFKN이라고 할 때 이것이 미치는 문화적 해독성은 상당한 정도에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종합적인 군사기지화 하고 있어서 기지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이며 한국 전역에 배치되어 있다. 주한미군에 투여되는 엄청난 군사비로 인해 기지가 설치된 곳이면 예외없이 그 일대를 중심으로 소비문화권이 형성된다. 주한미군은 물론 이들의 한국에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KATUSA(Korean Augmentation Troops of United States Army) - '미합중국 군대 한국증원부대'의 보조를 위해 종사하는 한국군으로서 소속은 한미